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 20 / August 2018

08

재정 인사이트

기획특집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와 한·아프리카재단

재정칼럼

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 및 인프라 협력 방안

대북 관련 정부사업 예산 및 정책방향

남북경제협력 중장기 단계별 추진과제

재정과 정보

이슈포커스

2018년 상반기 재정운용 실적

「국가재정정보 공개 확대사업」의 추진내용과 기대효과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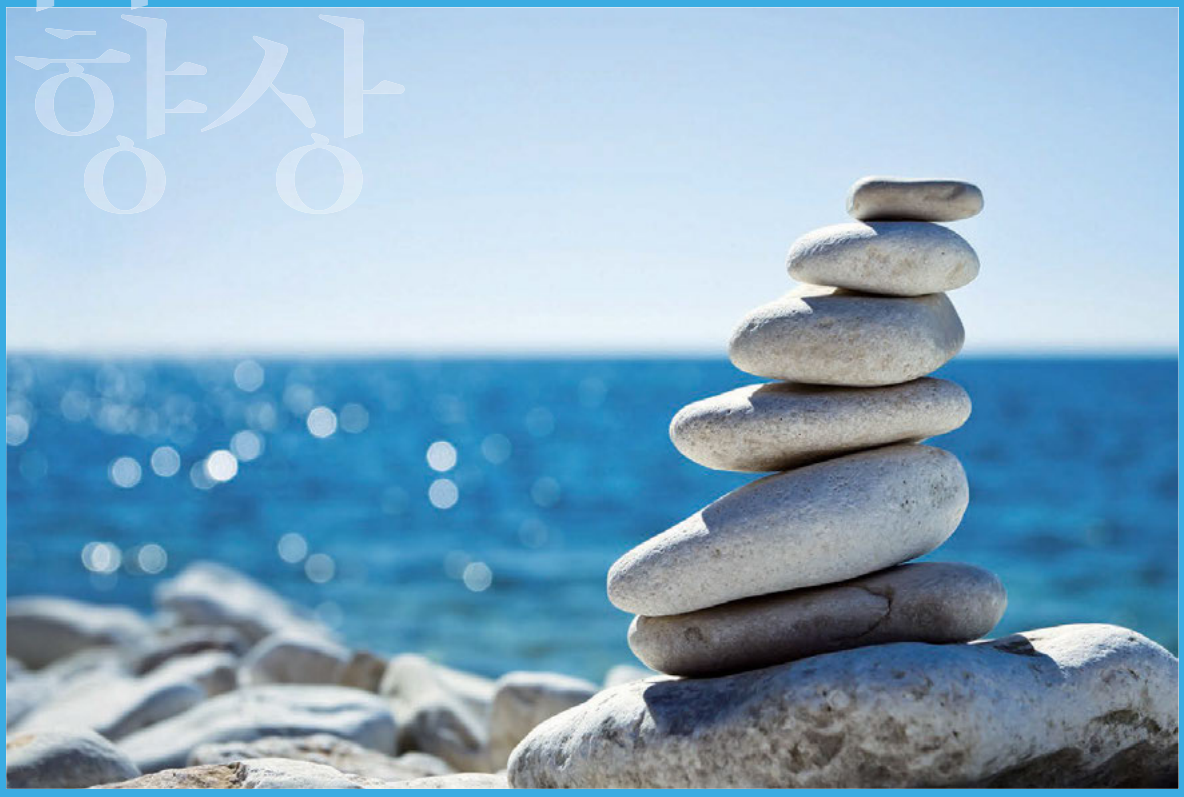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배움 향상

Photo Essay
포토에세이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배움의 가치

'배움이 있는 하루가 배움이 없는
기나긴 인생보다 낫다.'
쿠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 배우는 데
정해진 기간이나 나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평생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성장해갑니다.
배움의 가치를 알고 배움을 발판 삼아 성장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양한 재정정보 공개 확대로
전문 역량을 배양합니다.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AUGUST
2018 Vol. 20

재정 인사이트

06 **기획특집**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와 한 · 아프리카재단
정현정 외교부 아프리카과장

12 **재정칼럼**
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 및 인프라 협력 방안
한홍열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대북 관련 정부사업 예산 및 정책방향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남북경제협력 중장기 단계별 추진과제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

재정과 정보

24 **이슈포커스**
2018년 상반기 재정운용 실적
「국가재정정보 공개 확대사업」의 추진내용과 기대효과

38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50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양성평등

54 **해외재정동향**
호주 2018-19 예산안 및 재원배분 분석

62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⑧**
근대 유럽의 화폐가치 하락과 채무불이행

66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재정 인사이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재정 이야기
다양한 재정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합니다

기획특집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와 한 · 아프리카재단

정현정 외교부 아프리카과장

재정칼럼

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 및 인프라 협력 방안

한홍열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대북 관련 정부사업 예산 및 정책방향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남북경제협력 중장기 단계별 추진과제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와 한·아프리카재단

정현정
외교부 아프리카과장
hjjung02@mofa.go.kr

왜 세계는 아프리카 대륙에 주목하는가?

올해 초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8년도 세계경제 전망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할 것으로 주목을 받은 나라는 어디일까? 정답은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 올해 무려 8.3%라는 고성장이 예측된다고 한다. 2위 역시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에티오피아가 차지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와 같이 올해 가파른 경제성장이 예측되는 10개국 중 6개 국가가 바로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그 크기부터가 압도적이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메르카토르 도법에 따른 세계지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아프리카 대륙을 여타의 대륙들에 비해 작게 표현한 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는 미국, 중국, 인도, 서유럽은 물론이고 아르헨티나까지 넉넉히 품고도 남는다. 이 거대한 땅에 유엔 회원국의 1/4가 넘는 54개 국가들이 소재해 있으며, 현재 12억 수준의 인구는 2020년이면 20억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아프리카 대륙은 지구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불리며 잠재력의 차원을 넘어 성장 궤도 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2018년 경제성장률 상위 10개국

실질 GDP(시장가격) 증가율 (단위: %)

자료: The World Bank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를 인지하고 활발하게 진출해 왔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의 귀착지인 아프리카 대륙에서 매우 공세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0년부터 매 3년 주기로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개최해온 중국은 오는 9월 50여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 정상들을 베이징에 초청하여 대규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기 2기 첫 해외순방으로 지난달에도 아프리카 4개국(남아공, 세네갈, 르완다, 모리셔스)을 방문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일본 또한 경쟁적으로 1993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해왔던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의 개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 내년 8월 제7차 TICAD 회의를 요코하마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아프리카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던 인도와 터키 또한 냉전 종식 이후 지경학적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시켜오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을 향해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한중일 아프리카 관련 주요 지표 요약

국가	교역	투자	원조	교민 수	기업 진출	외교 인프라	
						본부	해외공관
중국	1,183억 불('16) (World Bank)	320억 불('16) (UNCTAD)	600억 불 공약 진행 중 ※ 2015년부터 3년 내	약 100만 명 이상	약 3,000여 개 이상	아프리카국 내 8개과 70여 명	52개
일본	122억 불('16) (World Bank)	100억 불('14) (포브스)	15억 불('16) (OECD)	7,591명('17) (일본 외무성)	440개	아프리카부 내 2개과 60여 명	30개
한국	129억 불('17) (한국무역협회)	2.4억 불('17) (수출입은행)	4.15억 불('17)	10,854명('17) (외교부)	298개 (KOTRA)	아프리카중동국 내 1개과 9명	20개

아프리카 대륙과 대한민국

이웃 국가들의 아프리카 중시 외교정책에 비해 우리의 대(對)아프리카 외교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외교부 내에서 아프리카 국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1980년대 냉전시기 대결외교를 목적으로 1개국 3개과가 있었으나, 1987년 남동아프리카과와 북서아프리카과(2개과)로 대폭 축소되었고 2009년 대국대과(大局大科)제에 따라 아프리카과(1개과)로 다시 한 번 축소되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여지와 그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조직은 거꾸로 반토막도 아닌 1/3 토막이 난 셈이다. 현재 외교부 아프리카과는 직원 8명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8개국 전부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70여 명, 일본의 60여 명 규모와 비교조차 어려운 숫자이다.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우리 기업 및 국민들의 관심은 점증하고 있으나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아프리카 지역본부 아래 9개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아프리카에 16개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각각 무역 · 투자 및 무상원조 업무에 특화된 활동을 하고 있어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아프리카 54개 국가와 포괄적인 파트너 관계 구축을 이끌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반도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왔다. 한국전 발발 당시 참전한 16개국 중 2개 국가가 바로 아프리카 대륙에 소재한 에티오피아와 남아공이었다. 냉전시기 아프리카 대륙은 남북한 간 치열한 외교의 장이기도 했지만, 냉전종식과 우리의 경제발전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전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든 2002 한일월드컵 공동유치를 비롯하여 우리가 유엔에서 추진하는 여러 결의와 최근의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와 몰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직 한국에서 아프리카는 멀고 먼 미지의 대륙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갈망해오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배와 내전을 겪고도 반세기 만에 자원빈국의 최빈개도국에서 공여국으로 위상을 전환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의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를 자신의 발전 모델로 삼는 주된 이유이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된 관심과 노력을 보이지 못하는 동안 오히려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알아본 민간 영역 주도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이 확대되어오고 있다. 당초 무 · 유상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진출의 기초를 마련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그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의 탄자니아 공식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1억 불 규모의 샐린더 교량건설사업은 최근 특기할 만한 성과 중 하나다. 다소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기니에서도 우리 기업이 태양광발전 기술력을 인정받아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광통신망 설치, 전자정부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르완다, 보츠와나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이외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인 아프리카 대륙에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번 국무총리 순방을 계기로 개최된 한-케냐/탄자니아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의미 있는 발표와 성과가 잇따랐다. 한 중소기업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마트워치를 기존 서구제품의 1/10 가격에 내놓았고, 우리의 IT 기술과 교육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아프리카 교육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청년기업도 있었다. 국내 모바일결제 솔루션 기업은 탄자니아 국영통신사와 교통카드시스템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과감한 출사표는 바로 아프리카 대륙의 모바일 친화적인 환경에 기인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휴대폰 보급률은 75%에 달하며, 이를 활용한 엠페사(M-Pesa) 같은 모바일금융이 아프리카에서는 대중적인 결제수단으로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다. 서구 국가나 중국, 일본과 같이 규모로 승부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이 뚜렷한 우위와 강점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오랜 속담처럼 '나무를 심어야 할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와 한·아프리카 재단의 출범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대외관계에 있어 그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적 중견국으로서의 외교적 공간을 감안할 때, 우리 외교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하여 확장시키는 '외교 다변화'는 필수 전략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대(對)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 첫 유엔 방문에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세네갈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상주공관이 개설된 모로코의 총리가 공식 방한한 바 있다. 지난 5월 부산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고 50억 불 규모의 금융패키지 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정상급 인사의 아프리카 방문이 보통 임기 말에나 이뤄지던 관례를 깨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케냐와 탄자니아 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대륙을 전담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교류협력을 추진할 정부기관이 긴요하다. 다행히도 이러한 임무를 담당할 새로운 기관이 최근 외교부 산하에 설립되었다. 올해 6월 25일 정식 개소한 한·아프리카재단(The Korea-Africa Foundation, KAF)이 바로 그것이다. 2016년 여야가 초당적 합의하에 발의한 「한 · 아프리카재단법」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러 부처로부터 기존 기관들과의 기능중복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많은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의 잠재력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한 우리 외교 인프라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었고 그 결과 감사하게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양해 속에 지난해 9월 가결될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6월, 2명의 상근임원과 17명의 직원, 17억 원의 예산이라는 소박한 규모와 인원으로 한 · 아프리카재단이 외교부의 4번째 산하기관으로서 첫 출발을 알리게 되었다.

우리의 대(對) 아프리카 전략을 견인할 한·아프리카재단

외교부는 우리나라 유일의 아프리카 전문 정부기관으로 설립된 한·아프리카재단이 한정된 조직과 예산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의 예산 성과를 내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나가고자 한다. 재단은 자체적으로 아프리카 관련 전문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활용함과 동시에 기존 유관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관련 역량을 결집하는 정보와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한 · 아프리카재단법」상 부여된 재단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 재단은 아프리카 국별·권역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한다. 아프리카는 통용되는 언어만 2천 종에 가까운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다양성의 대륙이다. 또한 각 국마다 급격한 정세변동 가능성이 상존하며 정치·경제·사회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측면이 커서 아프리카 진출 또는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아프리카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관련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재단은 점증하고 있는 수요에 부응하여 아프리카 각 국가 및 지역별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미 '아프리카 투데이' 제하로 매일 이메일을 통해 아프리카 주요 현지 이슈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 눈에 보는 아프리카 책자'를 7월 발간하여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타 대륙과는 달리 아프리카 대륙을 제대로 연구하는 기관이 드물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대(對) 아프리카 접근에 있어 전환기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재단은 기업과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게 된다. 재단은 코트라, 대한상의와 같은 국내 주요 경제단체 및 20개의 주한공관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특화된 경제 세미나,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과 한-아프리카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재단이 개소하기 무섭게 관련 요청이 쇄도하여 △아프리카데이 기념 비즈니스 세미나를 6월에 주한공관과 공동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을 크게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세미나 외에도 아프리카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와 자문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아프리카 진출 성공사례 분석과 공유, 유망 분야 도출, 기업 진출에 필요한 실질 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할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등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이들이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자 한다.

셋째, 재단은 아프리카 국가와의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단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미래 성장 동반자로서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파견하는 봉사단(World Friends Korea, WFK)으로 벌써 6,000여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아프리카의 지역 사회에서 귀한 경험을 하고 귀국하였다. 300여 개에 달하는 아프리카 진출 우리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현지의 생생한 비즈니스 환경을 경험한 사람도 상당할 것이다. 재단은 이러한 아프리카 유경험자들을 모아 '아프리카동창회(Af-PRO)'를

결성하고 이들의 노하우를 분야별·지역별로 축적·관리하는 '아프리카 전문가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젊은 대륙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열정을 모으고 또 이들의 올바른 아프리카 이해 제고를 위해 '한-아프리카 청년포럼' 및 '모의 아프리카연합회의' 개최를 통해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육성 기반을 조성해나가고자 한다.

끝으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교류 지원이다. 주요 의사 결정이 상명하달 방식으로 이뤄지는 아프리카 국가 특성상 고위급 인사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재단은 정부, 국회, 지자체 등 다층적인 차원에서 교류사업들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보다 유기적으로 관리되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해나가고자 한다.

한 · 아프리카재단 2018년도 예산

(단위: 백만 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은 참 무더웠다. 그런데 이 무더운 여름을 비유하기 위한 표현으로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서프리카(서울+아프리카)'라는 신조어가 온라인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실제 아프리카 대륙은 위도와 경도, 해발고도 등에 따라 기후와 날씨가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아프리카연합(AU) 본부가 위치한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8월 평균 최고 기온은 영상 21도에 불과했다. 이렇듯 많은 국민들에게 아프리카는 여전히 뜨거운 날씨와 야생동물이 뛰어다니는 드넓은 초원, 빈곤, 기아 등으로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30대 이하의 젊은 청년층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이 3억 명이 넘는 기회의 대륙이다.

재단이 비록 17억 원이라는 작은 예산으로 시작했지만, 아프리카가 미래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 준비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고자 한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재단의 행보에 독자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요청한다.

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 및 인프라 협력 방안

한홍열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yhan@hanyang.ac.kr

PUBLIC FINANCE COLUMN

한반도는 바야흐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극적 변화는 그동안 남북한 경제협력을 막아왔던 제약조건의 해소를 의미한다. 또한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던 한반도 경제통합 관련 논의도 새롭고 구체적인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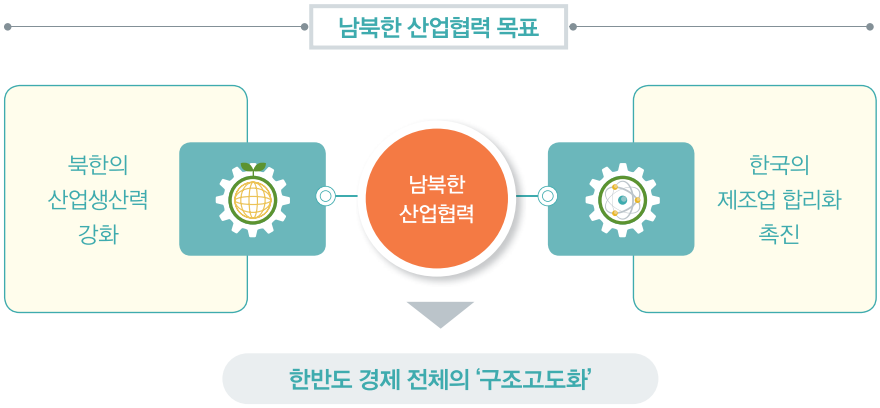
지난 70년간 남북한 간 경제교류는 실질적으로 전무하였다. 최근 정세의 변화는 남북한에 공히 새로운 경제가 경계선 넘어 나타난 것과 거의 동일한 현상을 낳게 된다. 남한으로서는 동아시아 한반도 북쪽에 저개발국가 경제가 '나타나고' 북한은 남쪽에 고도의 공업생산력을 갖춘 선진국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물리적으로' 큰 장벽이 되어 한반도를 다른 두 체제의 국가가 얼마나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험실로 만들었다. 같은 민족의 두 공동체가 이념과 정책 차이 그리고 국제 정치 경제적 조건에 따라 진화 과정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제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동의 번영을 이끌어내는 기적은 오롯이 한반도 모든 사람의 책임으로 다가왔다.

남북한은 어떠한 형태와 수준이 되었든 '경제공동체' 형성을 지향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여전히 일정한 제약조건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첫째, 완전한 통일 이전까지 남북한은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 한다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는 경제정책 주권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양측의 경제정책 목표는 경제협력 및 공동체 추진에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둘째, 경제의 통합 또는 경제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려면 양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 수렴해야 한다. 최소한 공동시장 형성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두 경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북한의 경제발전이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의 전제조건임을 의미한다. 자연스럽게 북한이 스스로 빠른 속도로 '산업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남한은 이의 지원에 대북협력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시장경제체제의 역사는 산업화가 적어도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임을 웅변한다. 거의 모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한국-중국의 순차적 산업화 과정을 통해 이러한 명제를 증명하였다. 북한경제의 난맥은 결국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산업화 프로세스에 동참하지 않은 결과이다. 과거 산업구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중화학공업의 몰락은 폐쇄적 경제체제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하여 경공업마저 민간의 생필품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생산력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은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면한 경제난을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성 향상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구호와 함께, '인민생활 향상'은 북한의 우선과제로 강조된다. 주민들의 생활에 가시적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농수산, 경공업, 주택건설 분야 등에 자원투입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북한이 발표한 경제정책도 경공업과 농업생산 촉진을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속, 화학, 에너지 부분의 자급율 제고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자연스럽게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의 산업화와 국제분업체계 편입 지원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북한이 중앙 및 지방개발구를 중심으로 공업생산력 및 수출역량 증진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남북경협 프로그램도 이와 일관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개성공업단지의 재개가 아니라 북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남북한 공동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 핵심은 주요 제조업에 있어서 남북한의 효율적 생산분업 또는 가치사슬의 형성이며 이는 남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 산업협력은 북한의 산업생산력 강화와 한국의 제조업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한반도 경제 전체의 '구조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인프라 개발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인프라 개발협력도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방대륙을 잇는 송유관, 철도와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많은 자본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일치한다는 증거는 많지 않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산업정책을 직접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이 바람직해 보인다. 산업화는 철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철길을 놓는다고 공장이 반드시 들어서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는 많다. 주요 지역별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수요에 입각한 규모별 전력공급시설, 도로보수, 관개시설, 물류시설 등의 공급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담론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경제협력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이라는 동북아의 개발도상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과정은 필수적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rainkim75@hanmail.net

PUBLIC FINANCE COLUMN

대북 관련 정부사업 예산 및 정책방향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 경제적인 상황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 활성화 등이 먼저 거론되었다. 아직 UN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제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문제들이 풀리고 난 후에 남한이 할 수 있는 투자 등은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 등은 정부를 위주로 먼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정부사업의 예산과 정책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여러 회담을 통하여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통일 및 경제와 관련된 대부분 연구들은 통일편익과 통일비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편익과 비용을 나누는 기준도 크게 급진적 통일과 점진적 통일로 나누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붕괴에 따른 급진적인 부분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비용 측면만 보아도 급진적 통일의 비용이 대부분 점진적 통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며, 비용에 대한 연구들도 대부분 급진적 통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전 연구들의 통일비용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1990년대 연구에

서 점진적 통일 시에 최대 2,102억 달러, 통일 후 10년간 남한 GNP의 7.5% 정도로 나타난다. 2000년대 연구에서는 연간 8,700억 원, 남한의 최저생계비와 북한의 산업화 지원으로 11년간 546조 원, 목표소득을 설정하면 8,201억 달러 정도이며 해외 연구에서는 5년간 60~795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2010년대에는 북한소득이 남한의 80% 수준으로 오게 하는데 2,374조 원~5,935조 원으로 추산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소득을 남한 수준으로 올릴 경우에 2,018조 원 정도로 추산하기도 한다(편집자 주: 통일 비용은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8월호 「통일비용 관련 기존 연구 자료」 참고).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편익을 감안한 투자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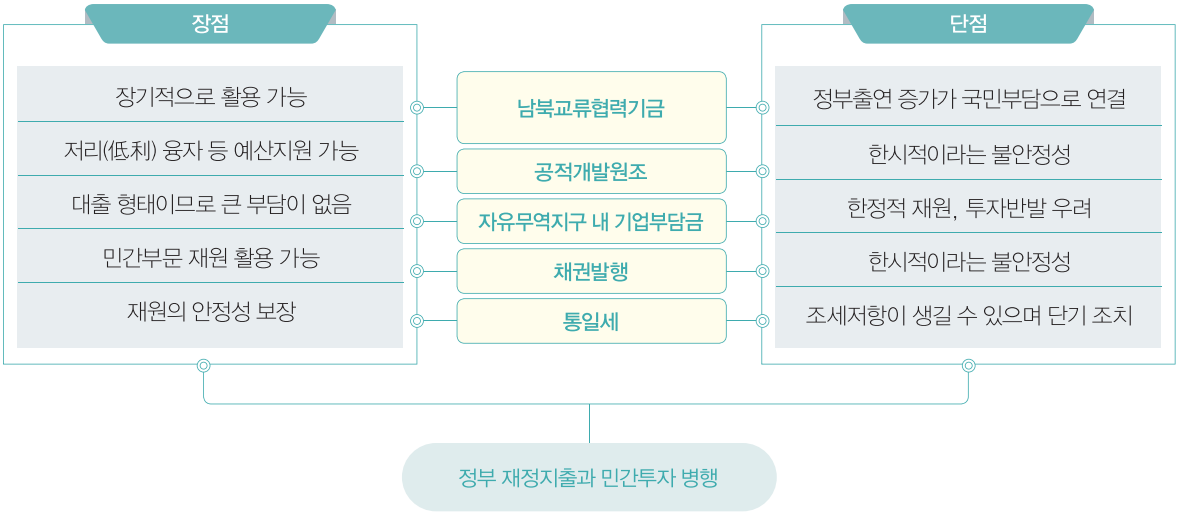
북한과 관련된 투자비용은 위기관리비용, 제도통합비용, 경제적 투자비용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점진적인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인 위기관리비용은 빠져야 한다. 따라서 크게 제도통합비용과 경제투자비용 정도가 남는다. 이미 북한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400~500개의 시장 등이 형성되어 있고, 돈주[1]와 같은 신흥 자본가들이 존재하므로, 경제와 관련된 제도통합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진적으로 베트남과 같은 경제개방이 된다면 제도통합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경제적 투자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인 통일의 형태를 가정하면 정부서비스, 인프라 투자(SOC)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와 행정비용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다. 행정비용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철도/도로, 항만/공항, 금융시스템, 에너지, 통신, 환경 등에 대한 구축비용을 남한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정상회담에서 인프라 투자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물투자와 같이 중요한 부분이 금융시스템이며, 아직 경제체제가 다른 북

1 돈주는 전주(錢主)의 북한식 표현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역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북한의 신흥 부유층을 말한다.

한에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또한, 북한이 베트남처럼 개방된다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인접하고 있고 미국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역량을 감안하여 선점할 부분들을 찾아 정부투자와 민간투자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나 재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SOC투자 등은 매우 큰 재원을 필요로 한다. 현재까지 재원마련은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ODA), 자유무역지구 내 기업부담금, 채권발행, 통일세 등이다. 2017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출연금 1,830억 원, 공공자금기금예수금 7,6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9,576억 원이 조정되었다. 2018년 6월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조성액(누계)은 13조 9천억 원이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총 공적개발원조 규모 1,466억 달러 중 한국은 22억 달러였다. 전체 자금 중에서 아시아에 지원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할 수도 있다.

모든 재원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하나 정부출연 비율이 2013년 이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저리(低利) 융자 등 예산지원이 가능하지만, 한시적이라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무역지구 내 기업부담금은 대출의 형태이므로 큰 부담이 없으나, 재원이 한정되고 투자반발이 있을 수 있다. 채권발행은 민간부문 재원 활용이 가능하지만 재정압박이 있고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세는 재원의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으며 단기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지출하면서도 민간투자가 동행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협력 중장기 단계별 추진과제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namsung@korea.ac.kr

PUBLIC FINANCE COLUMN

III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6·12 미북정상회담으로 남북경제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한 간 정치, 군사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북한의 잠재적 시장 확보와 저임금, 낮은 토지 비용 등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작용했다. 20여 년 전인 1995년까지만 해도 남북 교역 규모는 2억 8,700만 달러였지만 4차 핵실험 이전인 2014년에는 23억 4,300만 달러(약 2조 7,842억 원)로 8배 이상 늘었다. 개성공단만 봐도 2008년 18개였던 입주 기업이 2015년 기준으로 125개로 급증했고 북측 근로자는 5만 4,000여 명이나 됐다. 2015년 입주 기업의 생산액은 매달 5,000만 달러(약 600억 원)에 육박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남북 교역의 99.8%는 개성공단이 차지했다. 수많은 위기에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한 것은 역시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월 70.35달러에 불과하고 연장·휴일

수당, 사회보장비 등을 합쳐 북측 근로자 1인당 인건비는 월 150달러 안팎이었다. 베트남 인건비가 400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기업으로서는 충분히 이윤을 낼 수 있는 조건인 셈이다. 서울과 가까워 물류비도 아낄 수 있고 우리말과 역사를 공유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 것도 강점이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향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의 전제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가 20% 진행되면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핵화가 일보 전진하면 중단된 남북경제협력사업도 얼마든지 정상화할 수 있다. 철도, 도로 연결 등으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국내 건설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최소한 독일 통일 이전의 동서독 수준,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 수준까지 간다면 '남북한 경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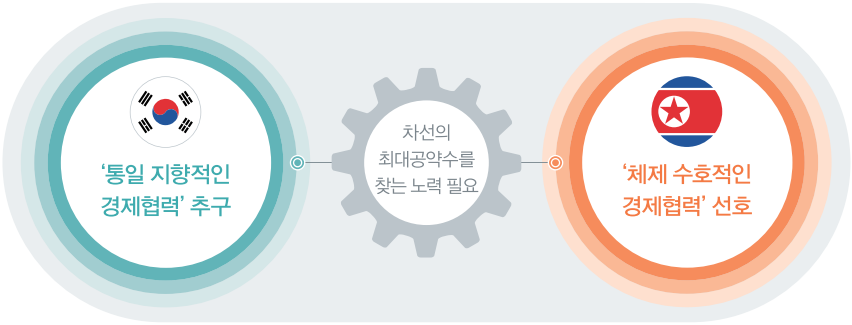
경제협력 동반자로서 북한에 대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SWOT) 분석을 해보면 명암이 교차한다. 북한은 인건비, 토지 비용이 저렴하고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핵심 지역으로서 지경학(地經學)적 가치가 있다. 다만 제약 요건도 적지 않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열악한 북한 경제의 환경에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관계 가변성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 광산을 개발해 남북이 나눠 가지면 '윈윈'하는 구조지만 도대체 누가 광산으로 가는 도로 비용을 부담할지 등이 암초가 되는 식이다. 실제 2004년 황해도 정촌 동(銅)광산 개발에서 광물자원공사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던 적이 있다. 여차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부분이다. 남북경제협력은 당장의 이익보다 경제통합을 촉진해 남북 모두에 경제적 편익을 가져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Economic Cooperation

벤처기업식으로 일시에 수익을 올리려는 인식은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은 경제협력의 높은 보완성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본질적인 개념 차이가 있다. 남측의 경제협력은 경제적인 논리에 기초해 북한 경제에 자생력을 갖게 하면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해 양측의 경제적인 이득을 확대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 공동체를 통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반면 북측 입장은 다르다. 경제협력은 어디까지나 정치 논리를 기반으로 한 대남정책의 일환이다.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결국 남측은 '통일 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북측은 '체제 수호적인 경제협력'을 선호한다. 이는 양측이 차선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노력이 없으면 남북경제협력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정부는 이번 미북정상회담 이후 대북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미 북한과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한 상태다. 지난 6월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두고 향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기대도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 식량·비료 지원 등의 순서로 대북경제협력과 지원이 본격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5·24 대북제재는 사문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향후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자돈이 필요하다. 자본 출처는 북일 수교 배상금, 한국의 남북협력기금과 예산, IMF와 세계

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중장기 융자 등이 검토될 것이다. 기존 관행으로 볼 때 자금 사용 조건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제한된 개방으로 원산 등 특수 지역만을 개발하는 '제한개발 전략'이라 단기간에 투자 대비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예를 들어 원산관광특구에 수억 달러의 카지노 건설자금이 들어가지만 마카오 방식으로 개방되는 데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협력 입장차



현대그룹의 대북 7대 사업권 독점 논란이 있으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기에는 규모가 커서 결국 각 기업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로 사업 분야를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

향후 대북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재개에서 시작돼야 한다. 남한의 SOC가 가동되는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되는 이상적인 지역으로서 이미 검증된 사업이다. 우선 개성공단을 1단계에서 2, 3단계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계획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재개될 수 있는 사업이다. 백두산 관광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철도·도로 연결, 항만 개발 등 SOC 사업은 대규모 자본 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예산 조달 문제도 해결될 필요가 있다. 북한에 한국산 소비재를 판매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례로 의류, 과자나 각종 소비재 제품 등 중저가 경공업 제품을 특수 제작해 북한에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비료 등 한국의 과잉 생산물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은 일회성으로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안보 문제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 북한 비즈니스다. 리스크 없는 사업이 없다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돈 버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물론 리스크를 진짜 기회로 만든다면 노다지를 캘 수도 있겠지만.

재정과 정보

통합화, 표준화, 정보화를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신뢰성 있는 재정 통계로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을 지원합니다

이슈포커스

2018년 상반기 재정운용 실적

「국가재정정보 공개 확대사업」의 추진내용과 기대효과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양성평등

해외재정동향

호주 2018-19 예산안 및 재원배분 분석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근대 유럽의 화폐가치 하락과 채무불이행

2018년 상반기 재정운용 실적

박정수 재정운영지원팀 부연구위원
mymajesty@kpfis.kr

상반기 재정운용 실적의 관리는 예산안 편성 시점에서 설정한 재정목표의 달성도를 확인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경제·재정 여건과 재정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 이후의 재정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재정 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상반기 재정 집행실적을 논의했으며 동시에, '2018년 하반기 경제 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하반기 이후의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는 등 재정운용 실적을 관리하고 재정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8년 상반기 경제·재정여건 변화와 정부의 주요 재정 집행 실적, 그리고 하반기 이후의 재정운용방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상반기 경제·재정 여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는 2018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하였다. 2017년의 경제 성장(3.1%)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높은 5.5%로 설정하고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상반기 투자 부진, 조선·자동차 산업 등의 구조조정과 부진으로 인해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되었다. 2018년 1분기 성장률은 2.8%, 2분기 성장률은 2.9%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2.9%(편성시점 대비 -0.1%p)로 수정하였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경제가 상반기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수출·제조업 등 고용 창출효과가 낮은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고용증가 제약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미국 금리인상 등의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

주요 경제 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예산 편성시점전망[1]	2018년 실적		2018년 수정전망[2]
			1분기	2분기[3]	
경제성장률(%)	3.1	3.0	2.8	2.9	2.9
취업자증감(만 명)	31.6	36.0	18.3	10.0	18.0
소비자물가(%)	1.9	1.8	1.3	1.5	1.6
경상수지(억 달러)	785.0	705.0	118.0	178.5	640.0
세계경제성장률(%)	3.7				3.9

주 1) 기획재정부, 2018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17. 7. 25.
2) 기획재정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2018. 7.18.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최종검색일: 2018. 8. 6.
4) IMF, Economic Outlook, July 2018

정부는 2018년도 예산을 428.8조 원으로 확정했으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4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5월에 확정하였다. 지출확대 규모는 3.9조 원이며, 청년 일자리 예산(2.9조 원),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예산(1.0조 원)을 증액하였다. 세입 경정이 없이 지출을 확대하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 대비 2.9조 원 악화된 31.4조 원 적자이다.

주요 재정 지표

	2017년 결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B)	
지출 규모(조 원)	406.6	428.8	432.7	3.9
관리재정수지(조 원) (GDP대비, %)	−18.5 (−1.1)	−28.5 (−1.7)	−31.4 (−1.7)	−2.9
국가채무(조 원)[주] (GDP 대비, %)	660.7 (38.2)	708.2 (39.5)	700.5 (38.6)	−7.7

주: 2018년의 추경 조정은 2017년 예산 대비 결산 실적(예산 기준 669.9조 원 대비 결산 660.7조 원, 9.2조 원 감소)을 반영한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확정, 2018.5.21.

재정 집행 실적

2018년의 총수입 규모는 447.7조 원, 총지출 규모는 432.7조 원이다. 6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243.8조 원으로 예산(추경 기준) 대비 진도율은 54.4%이며, 2017년도 6월(52.8%)보다 1.6%p 높았다. 수입 진도율 개선은 국세 수입 여건 개선에 따른 진도율 개선에 기인한다. 2018년 국세 수입 진도율은 58.6%로 2017년 대비 3.7%p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법인세(64.4%), 소득세(60.7%)의 진도율이 높았다.

6월까지 누적 총지출은 247.3조 원으로 예산(추경 기준) 대비 집행률은 57.2%이며, 2017년 6월(55.0%)보다 2.2%p 높다. 집행률 개선의 원인은 관리대상사업의 조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으로 인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과학기술(73.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75.5%), 국토 및 지역개발(64.8%) 등이 높았으며, 성질별로는 출연금(연구개발 76.4%, 일반 67.2%),

건설보상비(67.3%), 자치단체 이전(63.9%) 등이 높았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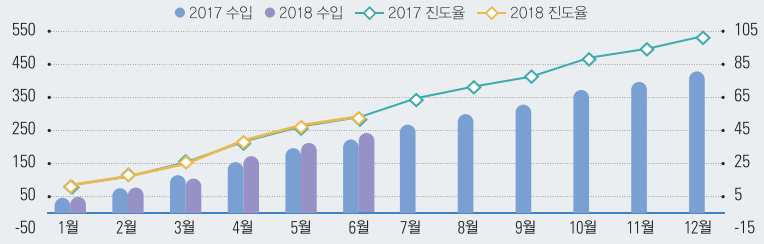
6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3.5조 원 적자이며, 2017년 6월의 2.2조 원 적자보다 1.3조 원 악화되었다. 월별 재정수지 악화는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진도율 증가(2017년 대비 1.6%p 증가)보다 빠른 지출 집행률 증가(2017년 대비 2.2%p 증가)에 기인한다.

총수입 및 총지출 상반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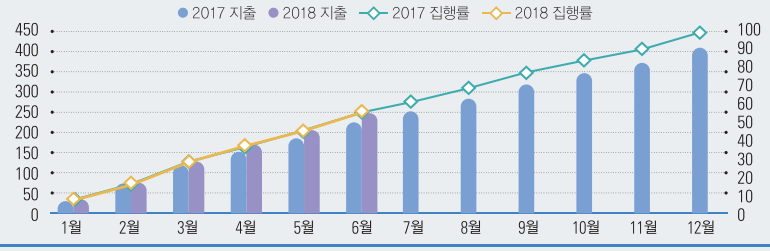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추경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수입 (진도율)	423.1 (–)	47.2 (11.2)	73.3 (17.3)	113.4 (26.8)	163.1 (38.5)	196.0 (46.3)	223.2 (52.8)	267.2 (63.2)	299.4 (70.8)	329.6 (77.9)	372.4 (88)	399.2 (94.4)	430.6 (101.8)
	지출 (집행률)	410.1 (–)	32.3 (7.9)	69.3 (16.9)	117.3 (28.6)	154.0 (37.6)	184.8 (45.1)	225.4 (55.0)	251.1 (61.2)	282.0 (68.8)	317.0 (77.3)	345.2 (84.2)	370.0 (90.2)	406.6 (99.1)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	13.0 (–28.9)	14.9 (12.7)	4.0 (–1.1)	–3.9 (–14.1)	9.1 (–5.0)	11.3 (–7.0)	–2.2 (–24.1)	16.1 (–8.3)	17.4 (–10.2)	12.7 (–18.5)	27.2 (–7.4)	29.2 (–8.8)	24.0 (–18.5)
2018	수입 (진도율)	447.7 (–)	50.8 (11.3)	77.4 (17.3)	121.2 (27.1)	169.9 (37.9)	214.0 (47.8)	243.8 (54.4)	–					
	지출 (집행률)	432.7 (–)	35.8 (8.0)	76.5 (17.1)	122.9 (28.6)	169.6 (37.9)	205.4 (45.9)	247.3 (57.2)	–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	15.0 (–31.4)	15.0 (12.6)	0.9 (–3.9)	–1.8 (–10.5)	0.2 (–13.6)	8.6 (–9.2)	–3.5 (–2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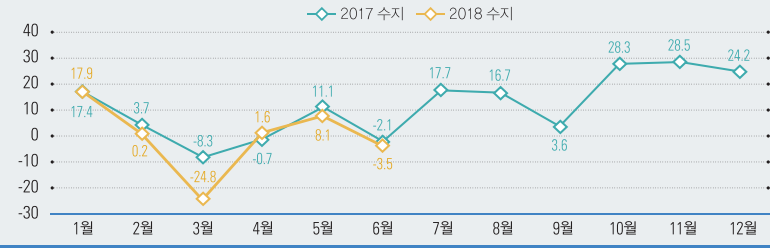
월별 누적 총수입 및 진도율



월별 누적 총지출 및 집행률



월별 통합 재정수지 (누적)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8월호

1 분야별, 성질별 진도율은 본예산 집행계획 기준이다.

재정 조기집행 실적

재정집행관리제도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이다. 정부는 경기조절효과를 위해, 경기 예측을 바탕으로 상반기 집행률 목표를 설정하며, 2014년 이후 매년 총 관리대상사업 예산의 5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8년 조기집행 점검 대상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로 총 280.2조 원 규모이며, 집행 목표는 162.6조 원(58.0%)이었다. 6월까지 계획대비 실적은 107.1%(전체 관리대상사업 예산 대비 62.1%)로 목표를 4.1%p 초과 달성하였다.

재정 조기집행 실적

(단위: 조 원, %)

구분	2018년 계획(A)주	6월 계획		6월 실적		계획 대비 달성도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금액 (C-B)	비율 (C/B)	(C/A) -(B/A)
합계	280.2	162.6	58.0	174.1	62.1	11.5	107.1	4.1
중앙부처	238.6	138.9	58.2	149.3	62.6	10.4	107.5	4.4
예산	200.9	118.1	58.8	125.7	62.6	7.6	106.4	3.8
기금	37.8	20.8	55.1	23.6	62.6	2.8	113.6	7.5
공공기관	41.6	23.7	56.9	24.8	59.5	1.1	104.6	2.6

주: 2018년 계획은 당초예산 기준이며,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은 별도로 관리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년 제 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8. 7. 31.

최근 5년간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 상반기 집행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및 실적

(단위: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획	55.0	58.0	58.0	58.0	58.0
실적	58.1	60.0	60.8	59.0	62.1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8. 7. 31.

핵심사업 집행 실적

핵심사업의 지정과 집행관리·평가는 재정성과관리 강화, 재정혁신과 연계하여 2018년에 기존의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메타평가를 대신해 새로 도입되었다. 핵심사업 점검 대상은 국정과제 관련 주요 정책사업, 대규모 재정사업, 유사중복 우려사업, 전문가·국민의견 등을 종합해 고려해 선정되었다. 규모는 80개 사업 23.1조 원이며, 노인,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일자리사업 15개, 창업·관광육성·문화콘텐츠산업 진흥 등 신성장동력 확충사업 18개, 행복주택

등 소득기반확충사업 10개, 급식소 위생강화 등 안심국가사업 23개로 구성된다.

핵심사업의 집행률은 2018년 총지출의 연간 집행률과 같은 5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동력 확충 유형의 사업이 4.2조 원 중 3.0조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72.8%로 가장 높고, 소득기반 확충 유형 사업이 3.4조 원 중 1.1조 원을 집행, 33.3%의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으로는 3.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2]이 6월까지 1조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35% 수준이며, 부정수급 방지, 서류보완 등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신청자 수가 지원 대상 목표에 근접한 만큼 하반기 집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3]. 가장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4]으로 5,494억 원 중 1,065억 원을 집행(19.3%)하였다. 지급기한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6개월 단위로 사후 지급되는 특성으로 인해 하반기에는 집행률이 개선될 전망이다[5].

핵심사업 집행 실적

(단위: 억 원, %)

	사업수주)	본예산(A)	6월 집행액(B)	미집행액(A-B)	집행률(B/A)
일자리	15	78,467	42,698	35,768	54.4
성장동력 확충	18	42,106	30,650	11,457	72.8
소득기반 확충	10	34,985	11,661	23,324	33.3
안심국가	23	57,804	34,635	23,169	59.9
인적자원개발	14	17,918	12,366	5,552	69.0
총합계	80	231,280	132,011	99,269	57.1

주: 단위사업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80대 '핵심사업 평가' 실시, 2018. 1. 11.

2018년 신규사업 집행실적

신규사업은 부처에서 예산안 편성 당시 제안한 사업,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2018년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330개 사업 5조 6,061억 원이다[6].

신규사업의 집행률을 분야별로 살펴볼 경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과학기술, 교육, 보건 분야가 70% 이상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국방, 사회복지, 농림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등 분야의 집행률이 40%에 미달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집행 잔액의 75%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발생하였다. 신규사업 집행잔액은 대부분 위 핵심사업에서 언급한 일자리안정자금에서 발생하였다. 정부·국회 제출별로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인 이하 고용 기업의 사업주에게 최대 노동자 1인당 월 보수의 13만 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3 2018년 6월 27일 기준 신청자 209만 명으로 당초 정부 추정 지원대상 236만 명의 90%이다.
4 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등의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1인당 40(대기업)~80(우선지원대상기업)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5 특정 기간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지급되며, 2017년에도 상반기 집행률(39.4%)보다 하반기 집행률(88.0%)이 높았다.
6 방위사업청은 신규사업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살펴볼 경우 정부 신규사업은 270개로 6월까지의 집행률은 30.6%이며, 국회 신규사업은 60개로 6월까지 집행률은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사업 제출별 · 분야별 상반기 집행현황

(단위: 억 원, %)

		사업수주)	본예산 (A)	6월 집행액 (B)	미집행액 (A-B)	집행률 (B/A)
제안 주체별	정부	270	54,011	16,517	37,494	30.6
	국회	60	2,050	305	1,745	14.9
	합계	330	56,061	16,822	39,239	30.0
분야별	교육	10	290	251	40	86.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	541	450	91	83.1
	과학기술	14	293	231	62	78.8
	보건	17	590	407	183	69.0
	통신	16	470	225	245	47.9
	환경	11	278	130	148	46.8
	공공질서 및 안전	20	324	134	189	41.5
	문화 및 관광	9	345	142	203	41.2
	국방	4	218	78	140	35.9
	사회복지	31	43,636	13,012	30,625	29.8
	농림수산	49	3,442	908	2,533	26.4
	일반·지방행정	36	1,449	234	1,215	16.2
	교통 및 물류	54	2,730	439	2,291	16.1
	국토 및 지역개발	30	1,163	163	1,000	14.0
	통일·외교	8	292	17	275	6.0
	합계	330	56,061	16,822	39,239	30.0

주: 세부사업수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
각 부처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18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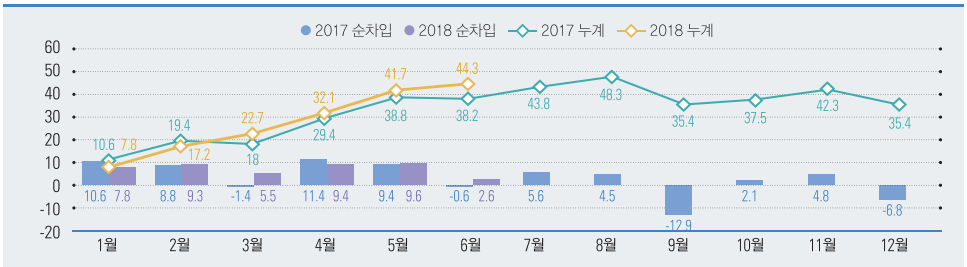
일부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은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하거나 본격화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두 번째 규모의 아동수당 신규사업(7천억 원 규모), 농림수산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타작물재배지원(1,368억 원 규모) 등은 9월부터 집행이 시작되며 SOC분야 14개 사업 1,802억 원은 하반기에 집행을 착수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채무

6월까지 국가채무는 2017년보다 총 44.3조 원이 순증하였다. 이는 전년 동월(38.2조 원)보다 6.1조 원 증가한 수치이다.

2018년도 상반기 중앙정부 채무 추이(잠정)

(단위: 조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순차입	10.6	8.8	−1.4	11.4	9.4	−0.6	5.6	4.5	−12.9	2.1	4.8	−6.8
	누계	10.6	19.4	18.0	29.4	38.8	38.2	43.8	48.3	35.4	37.5	42.3	35.4
2018	순차입	7.8	9.3	5.5	9.4	9.6	2.6	–					
	누계	7.8	17.2	22.7	32.1	41.7	44.3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8월호

중앙정부 채무의 87.7%[7]을 차지하는 국고채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만기 도래 및 조기상환에 의해 상환이 발생한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초에 발행한도와 상환계획을 설정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발행 및 상환을 월별로 관리하고 있다. 국고채의 2018년도 발행 한도는 106.4조 원, 상환 계획은 69.7조 원, 발행량에서 상환액을 차감한 순증규모는 36.7조 원으로 2017년(37.6조 원)보다 적다. 국고채는 6월까지 57.7조 원을 발행하고 15.0조 원을 상환하였으며, 순증 규모는 42.7조 원으로 2017년 6월(35.3조 원)보다 7.4조 원 확대되었다. 상반기 국고채 순증 규모가 2017년에 비해 큰 이유는 발행량 증가보다는 상환액 감소에 의한 것이다(상환계획 대비 실적 2017년 33.6%, 2018년 21.3%). 2018년 6월 기준 국고채 발행 57.7조 원, 상환 14.9조 원으로 발행은 전년 동월 대비 0.2조 원 증가, 상환은 7.3조 원 감소하였다.

국고채 발행 상한 및 상환 계획 대비 실적(잠정)

(단위: 조 원, %)

		상한·계획(A)	6월 실적(B)	진도율(A/B)	결산
2017	발행(C)	103.7	57.5	55.4	100.8
	상환(D)	66.1	22.2	33.6	71.0
	순증(C−D)	37.6	35.3	–	29.8
2018	발행(C)	106.4	57.7	54.2	–
	상환(D)	69.7	15.0	21.3	
	순증(C−D)	36.7	42.7	–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2017. 12. 20.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8월호

7 546.7조 원, 2017년 결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623.3조 원이다.

하반기 이후 재정운용 계획

정부는 국내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투자 부진, 미중 무역 갈등, 유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여 하반기에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확대 등 약 4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 활력을 제고하는 등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의 개선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하반기 재정보강 계획

	규모	내용
기금변경	3.2조 원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 업종·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 영세자영업자 운영자금 대출 1조 원 확대 등
주거·안전·환경투자	0.6조 원	노후 임대주택 정비(LH), 도로·철도 안전설비 확충(도로·철도공사), 미세먼지·오염저감 설비보강(발전공기업) 등 확대
지자체 추경	–	신속한 편성·지행으로 지역 SOC사업 조기 추진

자료: 기획재정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2018. 7. 18.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으로는 2019년에 전년 본예산 대비 5.7% 증액한 453.3조 원을 지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9년 재정 지출은 이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방향'에서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2019년 각 부처 예산요구현황은 458.1조 원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지출증가율이 1.1%p 높았다. 보다 구체적인 지출확대 계획은 9월 3일 예산안과 함께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재정지출 확대의 방향은 2018년 7월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제시되어 있다. 큰 틀은 노인,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분배구조 개선에 있다. 특히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일자리사업은 2018년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지역 3천 개 추가지원을, 그리고 2019년에는 노인일자리를 8만 개 이상 확대하여 60만 개를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2018년 9월부터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019년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 3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은 2018년 고령자·장애인 생계급여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며, 2019년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8-2019 재정지출규모 주요 발표 내용

(단위: 조 원, %)

	2018(A)	2019(B)	증가율(A/B)	발표일
국가재정운용계획	429.0	453.3	5.7[1)]	2017. 9. 제출
당초예산	428.8	–	–	2017. 12. 확정
추가경정예산	432.7	–	–	2018. 5. 확정
2019년 예산요구현황	–	458.1	6.8[2)]	2018. 6. 발표

주 1)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2) 당초예산 기준

「국가재정정보 공개 확대사업」의 추진내용과 기대효과

박성진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 집행정보팀
sjpark@kpfis.kr
이승환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 집행정보팀
nemo@kpfis.kr

2017년 7월 20일에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재정정보를 즉시 공개하도록 기본 방향이 논의 및 확정되었으며 그 중 세부집행내역(수입·지출) 정보공개를 포함한 기본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가 일부 개정('17년 12월)되어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 공개포털인 열린재정 홈페이지(www.openfiscaldata.go.kr)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문을 통해 기존 정보공개의 한계, 국가재정정보 공개 확대 사업의 추진배경과 내용,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한계

그동안의 노력

정부는 그동안 연도별 예산모습을 보여주는 '재정혁신타운'('14년), 집행현황을 공개하기 위한 '열린재정'('15년), 국고보조금 맞춤정보와 통계를 제공하는 'e나라도움'('17년) 등을 통해 재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수입·지출 공개의무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재정정보 공개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재정정보 공개 홈페이지

재정혁신타운('14년 개통)

열린재정('15년 개통)

e나라도움('17년 개통)

한계와 약점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관점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정보의 제한적·소극적 공개, 예산·보조금·부처별 사업 등 분야별 정보의 산발적 제공, 가독성이 떨어지는 수치 위주의 자료제공 등은 다양한 수요자(일반 국민, 교육기관, 재정전문가 등)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월드와이드웹재단(World Wide Web Foundation)에서 공공재정 데이터 개방 정도 측정지표 ODB(Open Data Barometer)를 기준으로 2017년 전 세계 국가들을 측정한 결과, 대한민국은 총 81개 국가 중 5위로써 총점으로는 상위권에 속하였지만 항목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의지를 나타내는 '준비성'과 공공데이터 개방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미하는 '영향력' 부분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데이터의 개방 정도 및 품질 수준에 대한 결과인 '실행력' 부분은 타 상위권 국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개방 정도 측정(ODB) 결과

국가	순위	순위변동	점수	준비성	실행력	영향력
영국	1	0 –	100	99	100	94
캐나다	2	2 ▲	90	96	87	82
프랑스	3	−1 ▼	85	100	71	88
미국	4	−2 ▼	82	96	71	80
한국	5	3 ▲	81	95	59	100
호주	5	5 ▲	81	85	78	78
뉴질랜드	7	−1 ▼	79	92	58	99
일본	8	5 ▲	75	84	60	89
네덜란드	8	−1 ▼	75	94	64	68
노르웨이	10	7 ▲	74	77	71	73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혁신방안 추진

혁신의 배경

현 정부의 대선공약집에는 정부·지자체의 예산정보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인수위원회에도 예산의 사용내역 공개 관련한 국민제안이 접수되었다.

이후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17.7.20.)에서 세부집행내역(수입·지출) 공개수준 확대 및 공개주기 단축, 분야별 사용자 맞춤정보 제공, '열린재정'을 중심으로 통합·연계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하는 기본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재정정보공개혁신방안보고('17.10.17.)에서는 정보의 충실성, 가독성, 접근성의 대폭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재정정보 공개 기본 방침

통합·연계	• 열린재정으로 관련 정보 통합 • 뉴스, SNS 등을 이용한 빅데이터 연계·분석으로 국민의 관심정보를 선제적으로 반영
사용자 주문서비스	• 시민·기업인·연구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정보 제공 • 주제별 인포그래픽 도입
세부집행내역 공개	• 공개수준 확대(단위사업 → 세부사업) • 건별 지출내역 공개 • 공개주기 단축(월별 → 일별)

열린재정의 개편

통합재정정보 공개 플랫폼인 '열린재정'은 2018년 1월 전면개편이 되어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별 맞춤형 재정정보 제공, 정보 가독성 향상을 위한 인포그래픽 적용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정 관련 웹툰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8년 7월부터는 세부사업까지 공개범위가 확대된 일별 집행내역정보와 함께 16개 분야로 표준화된 세부사업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출 세부사업 설명 자료

국가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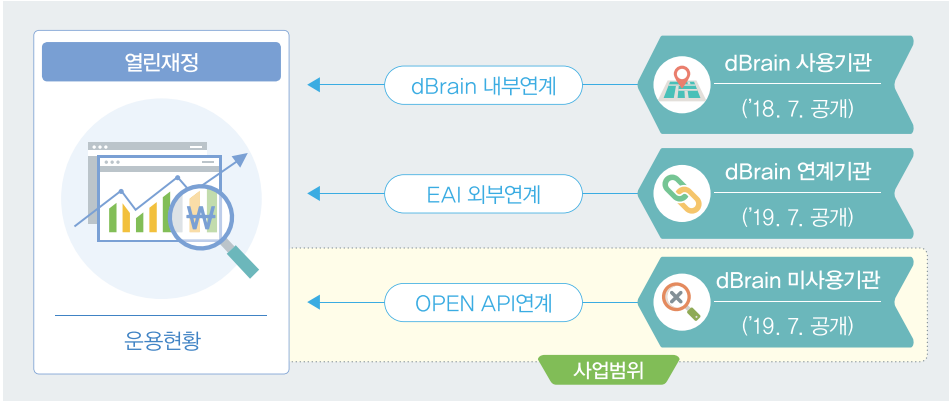
추진배경

현재 '열린재정'에서 제공되고 있는 세부집행내역(수입·지출)의 월별·일별 정보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을 사용하는 52개 정부기관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17년 12월)에 따라 dBrain 미사용기관도 정보공개 확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통합된 집행내역정보 제공을 위해 '열린재정'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업범위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dBrain 미사용기관의 집행내역정보를 '열린재정'으로 통합하기 위한 '국가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7월부터 '열린재정'에서 모든 기관의 월별·일별 세부집행내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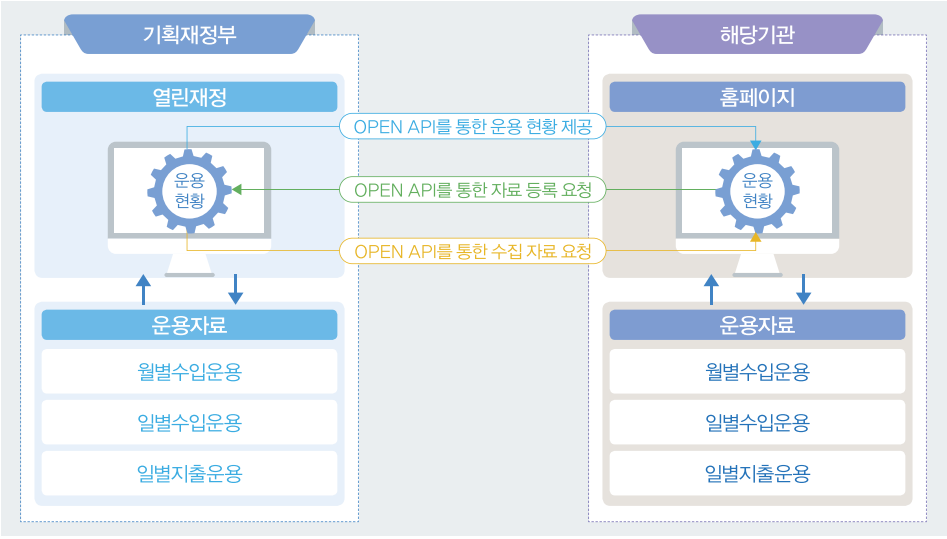
국가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 구성도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료 제공 및 수집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기관은 시스템 간 표준화된 통신방식(이하 OPEN API[1])으로 편리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집행내역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설계된 OPEN API를 통해 '열린재정'에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운용현황을 제공하고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대상기관에서 '열린재정'으로 운용현황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OPEN API 방식의 연계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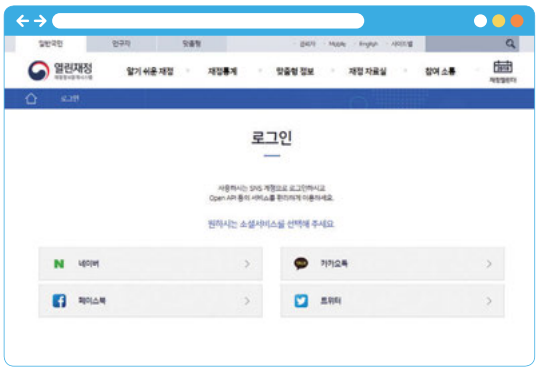
운용현황 관리

정보시스템이 미 구축되어 있는 기관은 제공되는 표준화된 엑셀 서식을 이용하여 수입(일·월)·지출(일) 운용현황을 '열린재정'에 업로드하고 화면의 관리기능을 활용하여 기등록된 현황의 수정·삭제·조회를 수행할 수 있다.

공개 대상기관 및 업무 담당자 관리

정보공개 대상기관 업무 담당자는 소셜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의 계정 인증을 통해 '열린재정'에 로그인 및 담당자 권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계정 인증 방식은 계정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소셜서비스를 이용한 계정 인증



수 있다. 정보연계의 보안성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암호화된 인증키[2] 관리기능 또한 추가될 계획이다.

운영자의 관리 효율성

'열린재정' 운영자는 확장성이 고려된 화면을 통해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추가, 정보공개 범위 확대, 정보공개 대상정보 추가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추후 변동된 요구사항을 추가 개발 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계화면에서는 재정정보의 연계시점, 성공건수, 실패건수 등을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보연계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에게 실시간 SMS를 전송하여 최단시간에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대효과

'국가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은 국가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과 기능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정보공개 대상기관 담당자는 표준화된 통신방식(OPEN API)과 운용현황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세부집행내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열린재정'으로 전송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공개수준 확대(단위사업 → 세부사업) 및 공개주기 단축(월 → 일)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민간·교육기관·재정전문가 등의 다양한 수요층은 dBrain 미사용기관이 포함된 세부집행내역을 활용하여 공공재정정보의 다양한 분석·통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정보의 재생산을 통한 신규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날로 높아지는 나라살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현재 진행 중인 '열린재정' 개선의 근간이 되었다. 개선이 완료되면 기존 대비 정보의 충실성, 가독성,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쉽고 편리하게 재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꾸준한 개선이 없다면 소비자의 관심은 곧 멀어지기 마련이다. 일회성에 그치는 변화가 아닌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재정집행'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

1 OPEN API란 구글, 네이버, 기상청, 통계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시스템 간 정보제공·수집의 표준방식이며 개발자는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날씨, 통계정보 제공 등)을 개발하고 서비스 할 수 있다.

2 '열린재정'과 각 연계기관시스템 간 사전에 약속된 암호화된 문자열이다. 송신시스템은 집행정보와 함께 암호화된 인증키를 전송하게 되며, 수신시스템은 전달받은 인증키를 복호화 하여 비교함으로써 약속된 연계기관에서 송신된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01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재정운용동향

총수입
243.8조 원

총지출
247.3조 원

통합재정수지
-3.5조 원

관리재정수지
-25.5조 원

2018년 6월 중 총수입은 29.8조 원, 총지출은 41.9조 원이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243.8조 원으로 진도율은 54.4%이고 전년 동기 대비 20.5조 원 증가(진도율 1.7%p 상승)하였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247.3조 원으로 진도율은 57.2%이고 전년 동기 대비 21.9조 원 증가(진도율 2.2%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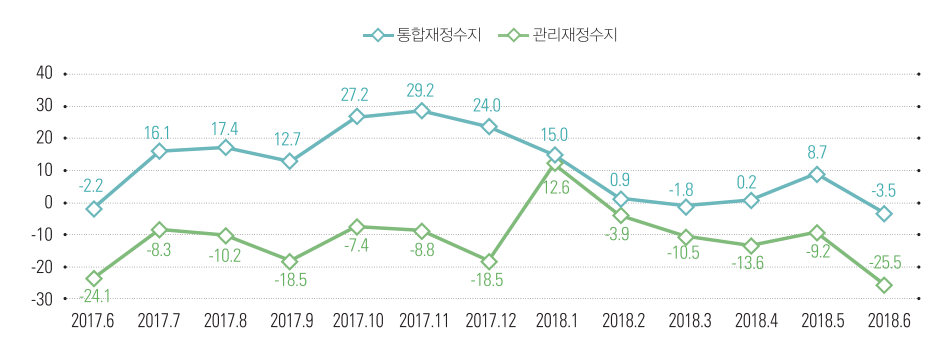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2017년							2018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수입 (진도율)	223.2 (52.8)	267.2	299.4	329.6	372.4	399.2	430.6	50.8	77.4	121.2	169.9	214.0	243.8 (54.4)
총지출 (진도율)	225.4 (55.0)	251.1	282.0	317.0	345.2	370.0	406.6	35.8	76.5	122.9	169.6	205.3	247.3 (57.2)
통합재정수지	-2.2	16.1	17.4	12.7	27.2	29.2	24.0	15.0	0.9	-1.8	0.2	8.7	-3.5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1.9	24.4	27.6	31.2	34.6	37.9	42.5	2.5	4.8	8.8	13.8	17.9	22.0
관리재정수지	-24.1	-8.3	-10.2	-18.5	-7.4	-8.8	-18.5	12.6	-3.9	-10.5	-13.6	-9.2	-25.5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5조 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22.0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5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4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4조 원 악화되었다.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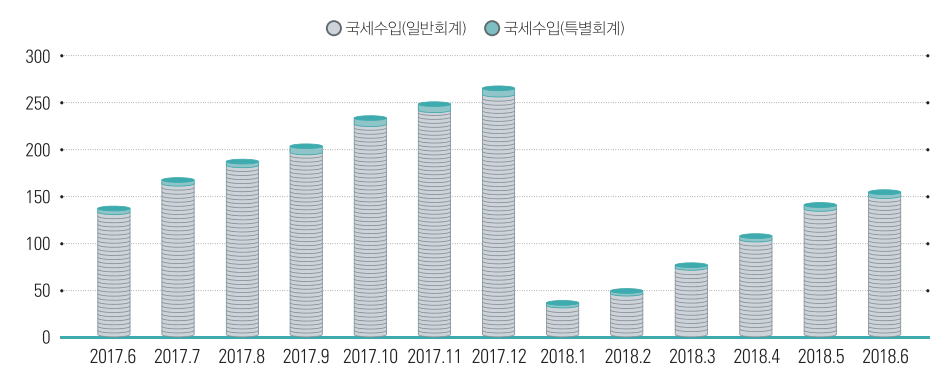
국세수입 추이

일반회계
152.9조 원

특별회계
4.3조 원

2018년 6월 중 국세수입은 16.5조 원(소득세 6.6조 원, 법인세 2.6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157.2조 원이며, 일반회계 152.9조 원과 특별회계 4.3조 원으로 구성된다.

(단위: 조 원)



	2017년							2018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국세수입	137.9	168.7	189.5	207.1	236.9	251.9	265.4	36.6	49.9	78.8	109.8	140.7	157.2
일반회계	134.6	164.4	184.8	202.0	231.0	245.7	258.5	35.4	48.4	76.8	106.6	137.0	152.9
특별회계	3.3	4.4	4.8	5.1	6.0	6.3	6.9	1.2	1.5	2.0	3.2	3.8	4.3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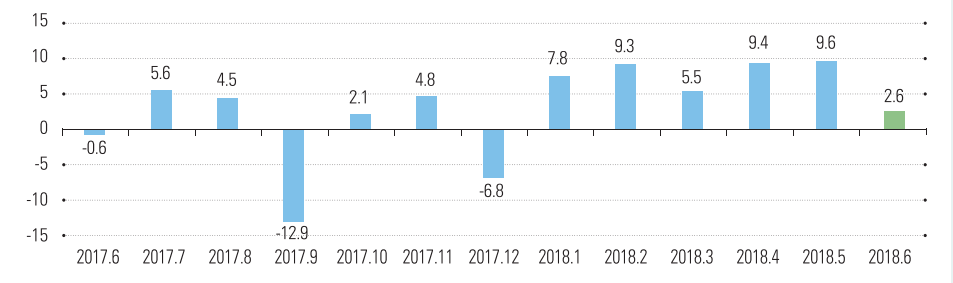
중앙정부 채무

월별 순차입 추이

순차입 전월 대비
2.6조 원

2018년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1.7조 원이다. 순차입 규모는 국고채권(2.2조 원), 국민주택채권(0.1조 원) 잔액 증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2.6조 원 증가하였다. 2017년 6월과 비교할 때 월별 순차입액은 3.2조 원 증가하였다.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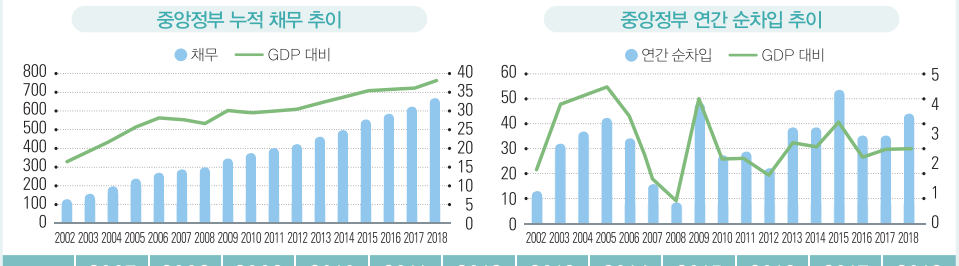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순차입	−0.6	5.6	4.5	−12.9	2.1	4.8	−6.8	7.8	9.3	5.5	9.4	9.6	2.6
연간 누계	38.2	43.8	48.3	35.4	37.5	42.3	35.4	7.8	17.1	22.7	32.1	41.7	44.3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중앙정부 채무 추이

누적 채무
671.7조 원

(단위: 조 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적 채무	289.1 (27.7)	297.9 (27.0)	346.1 (30.1)	373.8 (29.5)	402.8 (30.2)	425.1 (30.9)	464.0 (32.5)	503.0 (33.9)	556.5 (35.7)	591.9 (36.1)	627.4 (36.3)	671.7 (38.0)
연간 순차입	15.9 (1.5)	8.8 (0.8)	48.2 (4.2)	27.7 (2.2)	29.0 (2.2)	22.3 (1.6)	38.9 (2.7)	39.0 (2.6)	53.5 (3.4)	35.4 (2.2)	35.4 (2.5)	44.3 (2.5)

주 1) 괄호안은 GDP 대비 비중
2) 2018년 GDP는 한국은행 상반기 전망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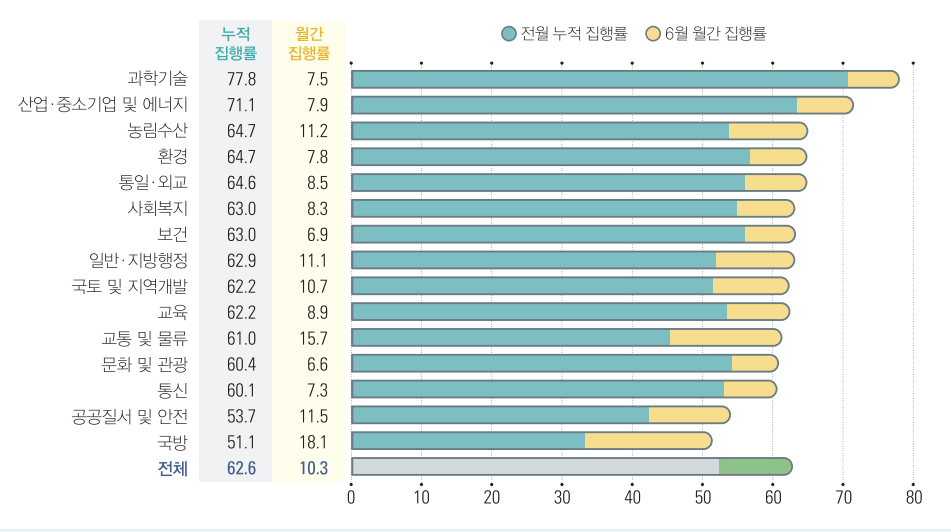
주요 관리대상사업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실적

6월 누적 집행률
62.6%

2018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앙부처 예산 238.6조 원 중 6월 말까지의 누적 집행액은 149.3조 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62.6%를 집행하였다. 6월까지 분야별 누적 집행률은 과학기술(77.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71.1%), 농림수산(64.7%), 환경(64.7%) 분야의 순으로 높으며, 국방(51.1%), 공공질서 및 안전(53.7%), 통신(60.1%) 분야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6월 월간 집행액은 24.6조 원(10.3%)이며, 분야별로는 국방(18.1%), 교통 및 물류(15.7%), 공공질서 및 안전(11.5%) 분야의 월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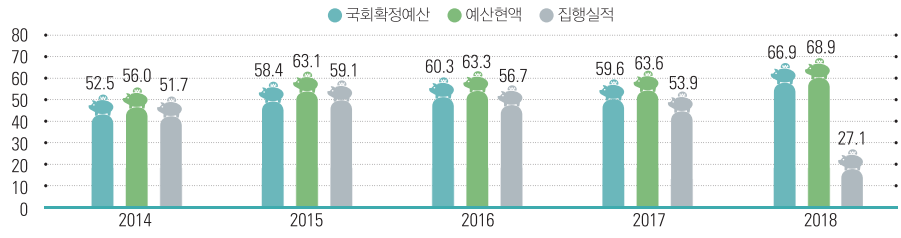
국고보조금

2018년 국고보조금 예산(본예산 기준)은 66.9조 원으로 전년도 예산 59.6조 원에 비해 약 7.3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예산현액은 68.9조 원이며, 6월 누적 실집행 실적은 27.1조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4% 실집행되었다.

연도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6월 누적 실집행률
39.4%

(단위: 조 원)



주: 2018년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적 실집행액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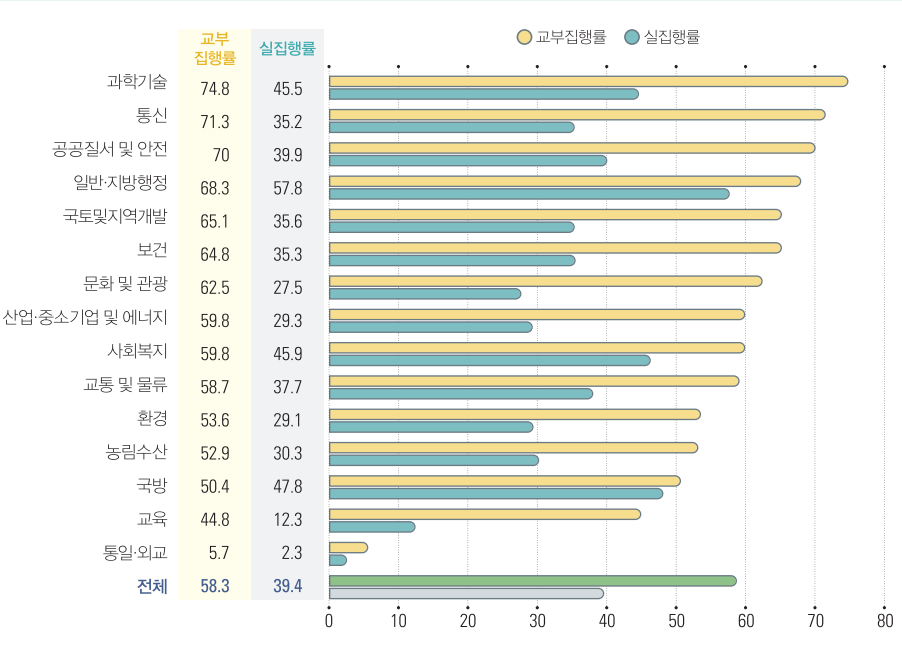
분야별 국고보조금 집행률

가장 높은 교부집행률
74.8%
(과학기술)

가장 높은 실집행률
57.8%
(일반·지방행정)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는 17조 6,242억 원, 농림수산 분야는 2조 8,269억 원, 환경 분야는 1조 3,48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조 1,43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조 869억 원으로 실집행되었다. 예산현액 대비 교부집행액을 나타내는 교부집행률은 과학기술 분야가 74.8%로 가장 높지만,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액을 나타내는 실집행률은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57.8%로 가장 높다.

(단위: %)



주: 2018년 6월 누적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02 융자금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빌려주는 금전적 급부를 의미한다. 이번 호에서는 융자금의 개념과 특성, 분야별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소개한다.

융자금의 개념과 특성

정부가 특정 대상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빌려주는 금전적 급부를 융자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낮게 설정하여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융자형태로 지원된다. 또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창업기업자금도 융자금에 속한다.

융자금 사례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택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게 가구당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2.25%~3.15% 이율(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10년, 15년, 20년, 30년을 각각 대출기간으로 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준다.
버팀목 전세자금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고 8천만 원 이내(수도권은 1.2억 원 이내)에서 2.3%~2.9%의 이율로 2년부터 최장 10년까지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자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검색일: 2018.8.6.

신용도가 낮은 계층과 중소·벤처기업은 민간 금융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어 이자부담이 크다. 이때 정부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소득재분배와 중소기업 육성, 잠재성장사업 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음에도 시중 은행이 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정부가 융자금을 제공하여 시장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재정융자사업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며, 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 대상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반면 출연금은 법률에 의해 설치된 정부출연기관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은 특정용도 사용을 조건으로 지자체나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되는 보조금과도 구분된다.

	융자금	출연금	보조금
개념	• 공공자금을 융자	• 법률에 의해 지원하는 금전적 급부	• 특정용도사용을 조건으로 지원
근거 법령	• 개별법에 근거	• 「국가재정법」 제12조 • 개별법에 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등
대상	• 개인 및 법인 등	• 법률에 의해 설치된 정부출연기관	• 지자체 및 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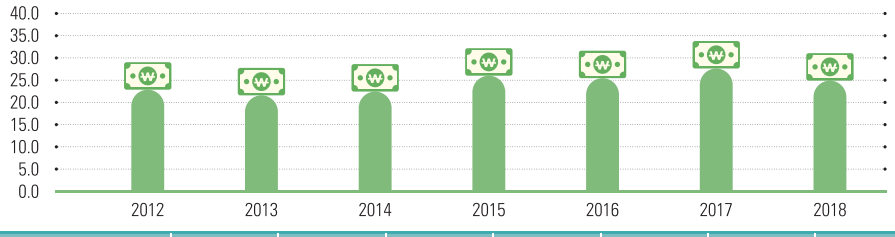
융자금 추이

2018년 융자금 (본예산 기준)
31.3조 원

2018년 총지출 대비 비율
7.3%

2018년도 융자금은 본예산 기준 31조 2,700억 원이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융자금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결산 기준). 반면 정부총지출 대비 융자금 비율은 2012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는 융자금 지출 증가 속도보다 총지출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단위: 조 원, %)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융자금(조 원)	28.9	27.9	28.7	32.4	32.0	33.9	31.3
총지출 대비 비율(%)	9.0	8.3	8.3	8.7	8.3	8.4	7.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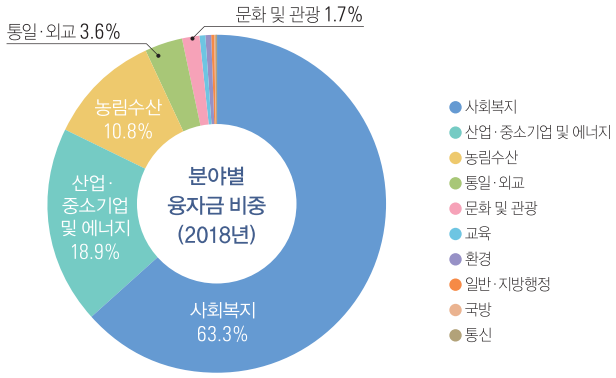
2018년도 분야별 융자금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9조 8,075억 원(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융자금 중 63.3%를 차지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5조 9,244억 원, 18.9%), 농림수산 분야(3조 3,707억 원, 10.8%), 통일·외교 분야(1조 1,182억 원, 3.6%) 순으로 융자금 규모가 크다.

분야별 융자금 현황

사회복지 분야
63.3%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8.9%

농림수산 분야
10.8%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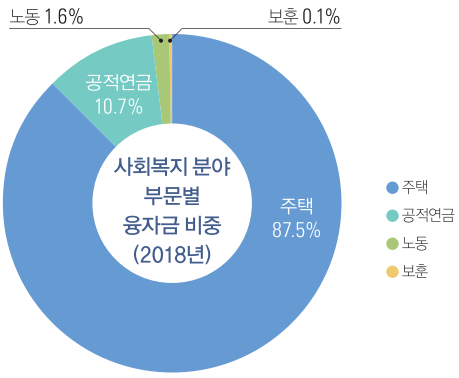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일반·지방행정	4,774 (1.7)	1,500 (0.5)	1,450 (0.5)	2,107 (0.7)	708 (0.2)	14 (0.0)	1,000 (0.3)
통일·외교	6,000 (2.1)	6,895 (2.5)	6,531 (2.3)	7,378 (2.3)	8,215 (2.6)	7,513 (2.2)	11,182 (3.6)
국방	1,601 (0.6)	1,690 (0.6)	1,786 (0.6)	1,261 (0.4)	1,380 (0.4)	747 (0.2)	426 (0.1)
교육	1,741 (0.6)	2,214 (0.8)	2,948 (1.0)	20,883 (6.4)	16,524 (5.2)	2,133 (0.5)	2,120 (0.7)
문화 및 관광	3,053 (1.1)	3,463 (1.2)	4,929 (1.7)	6,270 (1.9)	6,515 (2.0)	6,483 (1.9)	5,270 (1.7)
환경	1,339 (0.5)	1,489 (0.5)	901 (0.3)	1,151 (0.4)	1,114 (0.3)	1,408 (0.4)	1,376 (0.4)
사회복지	191,541 (66.2)	175,240 (62.8)	189,965 (66.2)	187,784 (58.0)	184,719 (57.7)	215,703 (63.6)	198,075 (63.3)
보건	110 (0.04)	30 (0.01)	– (–)	4,000 (1.2)	– (–)	– (–)	– (–)
농림수산	33,168 (11.5)	35,951 (12.9)	30,757 (10.7)	29,860 (9.2)	30,028 (9.4)	30,771 (9.1)	33,707 (10.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5,325 (15.7)	50,172 (18.0)	47,130 (16.4)	62,619 (19.3)	70,049 (21.9)	74,177 (21.9)	59,244 (18.9)
교통 및 물류	105 (0.04)	– (–)	– (–)	– (–)	– (–)	– (–)	– (–)
통신	422 (0.1)	542 (0.2)	570 (0.2)	600 (0.2)	730 (0.2)	400 (0.1)	300 (0.1)
합계	289,180 (100.0)	279,187 (100.0)	286,967 (100.0)	323,913 (100.0)	319,980 (100.0)	339,009 (100.0)	312,700 (100.0)

주: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전체 융자금 중에서 차지하는 분야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융자금 현황

주택 부문의 비중
87.5%
(2018년 기준)

융자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융자금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 부문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7조 3,500억 원), 전세임대(3조 3,010억 원), 공공임대(1조 7,112억 원), 행복주택(1조 3,395억 원) 등 주택 부문의 재정융자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단위: 억 원, %)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주택	158,515 (82.8)	140,940 (80.4)	159,137 (83.8)	156,178 (83.2)	156,401 (84.7)	186,385 (86.4)	173,317 (87.5)
공적연금	29,719 (15.5)	30,781 (17.6)	27,863 (14.7)	27,330 (14.6)	24,445 (13.2)	24,910 (11.5)	21,217 (10.7)
노동	2,635 (1.4)	2,899 (1.7)	2,421 (1.3)	3,756 (2.0)	3,489 (1.9)	4,023 (1.9)	3,144 (1.6)
보훈	281 (0.1)	310 (0.2)	321 (0.2)	324 (0.2)	290 (0.2)	290 (0.1)	295 (0.1)
취약계층지원	140 (0.1)	123 (0.1)	110 (0.1)	101 (0.1)	58 (0.0)	38 (0.0)	65 (0.0)
보육·가족 및 여성	190 (0.1)	136 (0.1)	75 (0.0)	57 (0.0)	37 (0.0)	57 (0.0)	36 (0.0)
기초생활보장	61 (0.0)	51 (0.0)	38 (0.0)	38 (0.0)	– (–)	– (–)	– (–)
합계	191,541 (100.0)	175,240 (100.0)	189,965 (100.0)	187,784 (100.0)	184,719 (100.0)	215,703 (100.0)	198,075 (100.0)

주: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사회복지 분야 융자금 중에서 차지하는 부문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회복지 분야
주요 재정융자사업
(2018년도)

주택구입 · 전세자금
7.4조 원

전세임대
3.3조 원

공공임대
1.7조 원

대표적인 사회복지 분야 재정융자사업(세부사업 단위)을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사업, 전세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민간임대사업 등의 융자금 규모가 크다. 공적연금 부분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는 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 공무원 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퇴직일시금의 일부 범위 내에서 대출해주는 공무원연금대부사업,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해주는 대여학자금융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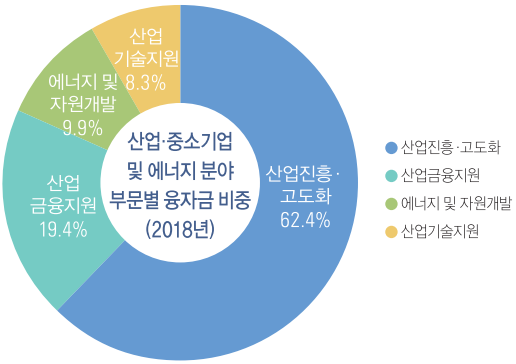
분야	부문	재정융자사업	융자금(억 원)	비중(%)
사회복지 분야	주택	주택구입·전세자금	73,500	37.1
		전세임대	33,010	16.7
		공공임대	17,112	8.6
		행복주택	13,395	6.8
		민간임대	10,842	5.5
		다가구매입임대	9,325	4.7
		국민임대	4,942	2.5
		분양주택	3,339	1.7
		집주인임대주택사업	2,933	1.5
		가로주택정비사업	2,000	1.0
		자율주택정비사업	1,500	0.8
	공적연금	생활안정자금대여(사립학교연금기금)	9,514	4.8
		공무원연금대부	6,000	3.0
		대여학자금융자	4,530	2.3
	노동	산재예방시설융자	1,228	0.6
	–	기타(18개)	4,904	2.5
	합계		198,075	100.0

주: 세부사업 단위의 예산이 1,000억 원 이상인 재정융자사업을 나열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부문별 융자금 현황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의 비중
62.4%
(2018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융자금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이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결산 기준으로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의 융자금 규모와 비중이 증가한 반면, 산업금융지원 부문의 융자금 규모와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융자금은 크게 증가하고, 산업금융지원 부문 융자금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창업기업지원' 재정융자사업이 산업금융지원에서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단위: 억 원, %)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산업진흥·고도화	5,074 (11.2)	26,367 (52.6)	25,421 (53.9)	32,083 (51.2)	37,620 (53.7)	45,517 (61.4)	36,989 (62.4)
산업금융지원	28,100 (62.0)	14,200 (28.3)	11,450 (24.3)	18,270 (29.2)	21,550 (30.8)	17,550 (23.7)	11,500 (19.4)
에너지 및 자원개발	9,071 (20.0)	6,305 (12.6)	6,759 (14.3)	8,767 (14.0)	7,379 (10.5)	5361 (7.2)	5,855 (9.9)
산업기술지원	3,080 (6.8)	3,300 (6.6)	3,500 (7.4)	3,500 (5.6)	3,500 (5.0)	5,750 (7.8)	4,900 (8.3)
합계	45,325 (100.0)	50,172 (100.0)	47,130 (100.0)	62,619 (100.0)	70,049 (100.0)	74,177 (100.0)	59,244 (100.0)

주: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융자금 중에서 차지하는 부문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주요 재정융자사업 (2018년도)

창업기업자금
1.9조 원

소상공인지원
1.6조 원

신성장기반자금
0.9조 원

2018년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융자사업 중에서 창업기업자금 융자사업(1조 8,660억 원)의 규모가 가장 크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대상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융자와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1조 6,025억 원)사업, 업력 7년 이상 신성장 유망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신성장기반자금(8,800억 원)사업 순으로 규모가 크다.

분야	부문	재정융자사업	융자금(억 원)	비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산업진흥·고도화	창업기업자금	18,660	31.5
		소상공인지원	16,025	27.0
		재도약지원자금	2,290	3.9
	산업금융지원	신성장기반자금	8,800	14.9
		투융자복합금융	1,700	2.9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	1.7
	산업기술지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900	8.3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3,000	5.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760	3.0
	–	기타(4개)	1,109	1.9
합계			59,2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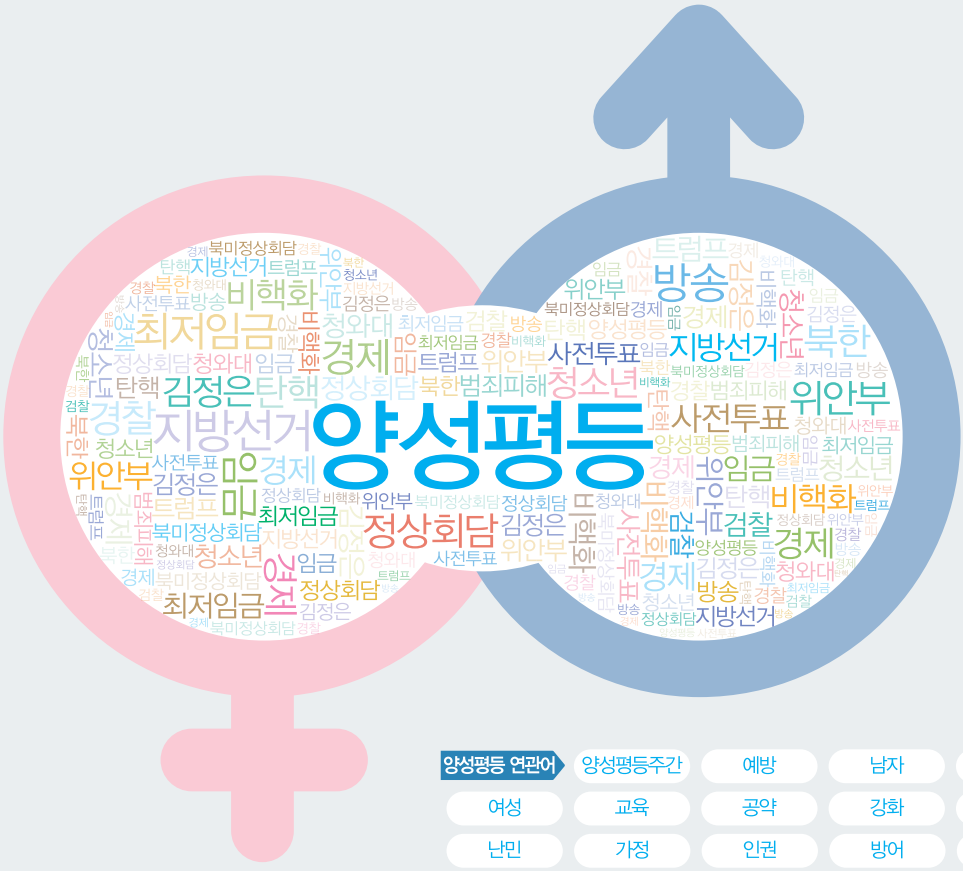
주: 세부사업 단위의 예산이 1,000억 원 이상인 재정융자사업을 나열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달의 이슈키워드:
양성평등

김상기
재정통계분석팀 연구원
sgkim@kpfis.kr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양성평등'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양성평등주간[1] 행사 맞이 등으로 양성평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참고



주: 양성평등은 유사어(젠더폭력, 성평등)을 포함하여 검색한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18.7.9.), 수집기간: 2018.6.1.~6.30.

성인지예산제도

정부는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제도[2]를 시행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성별영향분석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성인지예산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함으로써(성인지결산서) 양성평등적 재원배분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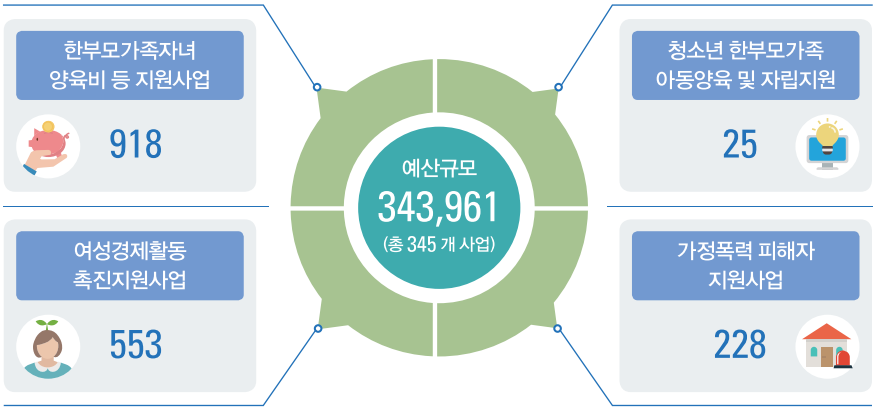
성인지예산제도는 1984년 호주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UN 세계여성회의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14년 기준[3] 미국, 독일 등 99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는 2010회계연도부터(기금은 2011회계연도), 지방정부는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2 「국가재정법」 제26조 및 제57조 참고
3 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2017.4.)

양성평등을 위한 2018년 성인지 예산

2018년 성인지예산(기금운용계획 포함) 대상사업은 모두 345개로 총 예산규모는 34.4조 원이며 건강과 복지 증진, 고용 격차 해소, 젠더폭력 근절과 인권보호,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단위: 억 원)



주 1) 정부안 기준임
2) 규모는 성인지 예산서의 예산규모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기금규모의 합임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한민국 정부, 「2018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918억 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30,000원씩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생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추가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가족 또는 미혼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에는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0,000원씩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는 월 50,000원씩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의 혜택 등 자세한 안내는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연중 가능하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도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한다(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 25억 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80,000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의료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으면 월 100,000원씩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한다.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비(입학비·수업료 등 실비)와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 원 한도)도 지원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에서 안내 받을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혼인·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는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제공 등 종합적인 취업을 지원한다(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533억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정보, 교육훈련 제공뿐만이 아니라 미취업 여성에게 인턴십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3개월간의 인턴기간 동안 매월 60만 원씩 인턴 연계기업에게 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연계기업과 취업여성에게 각각 60만 원씩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228억 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건강한 가정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 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상담이 필요한 여성(동반자녀 포함)을 위해 전국 208개소의 가정폭력 상담소와 365일 24시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국번없이 1366)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결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66개소의 보호시설에서 숙식, 치료 등을 제공하거나, 전국 315호의 임대주택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체적·정신적인 치료와 법률상담도 하고 있어, 신청·문의를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가까운 상담소 방문에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66번(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으로 전화하면 된다.

호주 2018-19 예산안 및 재원배분 분석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재정통계분석팀 부연구위원
mkim@kpfis.kr

호주 경제 전망

최근 호주 경제는 2017년 하반기 이후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 특히 광업 투자를 통해 견고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호주 정부는 2017-18년 경제성장률이 2016-17년 2.1%보다 증가하여 2.7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2018-19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3%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2017-18년 2.0% 상승에서 이후에는 상승세가 소폭 확대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분야 지표는 실업률이 2016-17년 5.6%에서 2017-18년 5.5%, 2021-22년까지 5.0%로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이 2016-17년 1.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1-22년까지 3.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고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2017-18년 2.75% 상승에서 2021-22년 1.25% 상승으로 1.5%p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호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전망자료 수치는 예를 들어 2 3/4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본문에서는 2.75%와 같이 서술한다.

호주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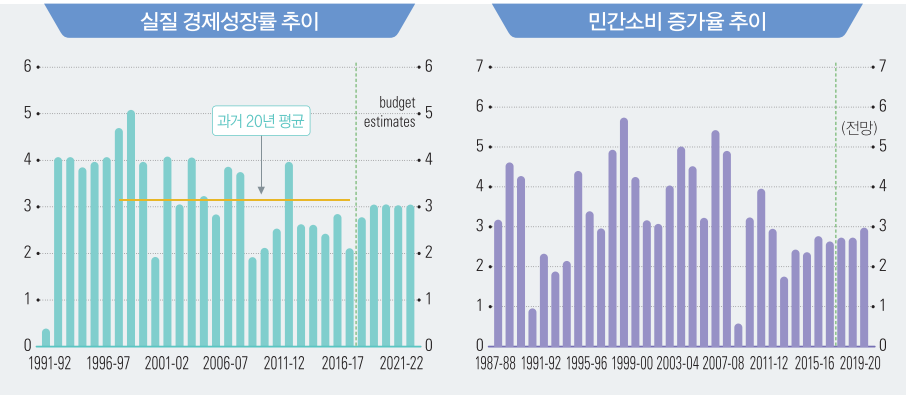
(단위: %)

지표	실적	추정			전망	
	2016-17년	2017-18년	2018-19년	2019-20년	2020-21년	2021-22년
경제성장률	2.1	2 3/4	3	3	3	3
고용 증가율	1.9	2 3/4	1 1/2	1 1/4	1 1/4	1 1/4
실업률	5.6	5 1/2	5 1/4	5 1/4	5 1/4	5
물가상승률	1.9	2	2 1/4	2 1/2	2 1/2	2 1/2
임금 상승률	1.9	2 1/4	2 3/4	3 1/4	3 1/2	3 1/2

주: 2016-17는 실적값, 2017-18 ~ 2019-20는 추정(forecast), 2020-21, 2021-22는 전망(projection)
자료: 호주 재무부(2018), Budget Strategy and Outlook Budget Paper No.1 2018-19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및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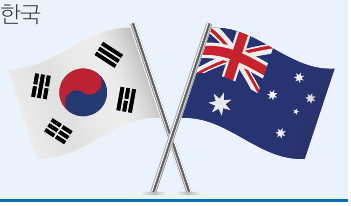


자료: 호주 재무부(2018), Budget Strategy and Outlook Budget Paper No.1 2018-19

한국, 호주 경제 비교(2017년 기준)

정부 예산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이념, 향후 추진 방향을 담기 마련이다. 국가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며, 간단하게 한국과 호주 경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호주의 인구는 2,460만 명 정도로 한국 인구의 47.8% 정도로 절반이 되지 않는다. 인구 구성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5.5%로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제 규모로 보면, 경상 GDP는 1조 3,234억 USD로 한국의 86.5% 수준이나, 물가수준을 고려한 PPP기준으로는 57.2% 수준이다. 1인당 GDP는 50,000 USD를 넘고 있으며, 한국 38,350 USD 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외개방도는 41.5%로 한국에 비해 수출입 의존도가 낮으나 광물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호주 정부규모(일반정부 기준)는 36.2%로 한국 32.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고용지표는 고용률(73.0%)과 실업률(5.6%)이 우리나라에 비해 모두 높은 편이다.



구분	호주(A)	한국(B)	A / B	자료
인구(천 명)	24,599	51,466	47.8%	World Bank
65세 이상 인구 비율(%)	15.5	13.9	1.12배	
면적(㎢)	7,682,300	97,480	78.8배	
경상 GDP(10억 USD)	1,323.4	1,530.8	86.5%	
경상 GDP(ppp 기준, 10억 USD)	1,127.3	1,969.1	57.2%	
1인당 GDP(USD)	50,588	38,350	131.9%	OECD
대외개방도	41.5%	80.8%	0.51배	
재정규모	36.2%	32.3%	1.12배	
고용률(%)	73.0	66.6	1.10배	
실업률(%)	5.6	3.7	1.51배	

주: 재정규모는 2016년 기준

2018년 예산안 총량

호주 2018-19년 예산안은 중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흑자 재정이 달성되도록 편성되었다. 2018-19년 총지출은 4,886억 달러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고, 총수입은 4,861억 달러로 전년대비 6.6% 증가하면서 순운영수지가 개선되었다. 2018-19년 순운영수지[2]는 24억 달러 적자로 전년도 126억 달러 적자에서 102억 달러만큼 적자폭이 줄었다. 호주 정부는 GDP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과거 평균 24.8%이며, 예산안에 중기 예산은 장기 평균을 초과하고 있으나, 점차 평균수준에 수렴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호주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추이(일반정부 기준)

(단위: 십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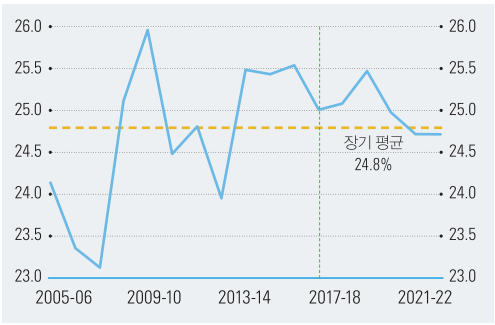
구분	실적	추정			전망		합계
	2016-17년	2017-18년	2018-19년	2019-20년	2020-21년	2021-22년	
수입(현금) (A)	409.9	445.1	473.7	503.7	525.5	554.0	2,056.8
지출(현금) (B)	439.4	459.9	484.6	497.5	514.5	537.3	2,034.0
순이익 기금수입(현금) (C)	3.6	3.5	3.6	3.9	–	–	7.5
재정수지(현금) (D=A-B-C)	-33.2	-18.2	-14.5	2.2	11.0	16.6	15.3
GDP 대비 비중	-1.9	-1.0	-0.8	0.1	0.5	0.8	–
총수입 (E)	415.7	456.2	486.1	512.8	537.9	568.2	2,105.0
총지출 (F)	447.8	468.8	488.6	504.2	518.2	540.8	2,051.8
순운영수지 (G=E-F)	-32.1	-12.6	-2.4	8.6	19.6	27.4	53.2
순자본투자 (H)	2.9	0.7	5.0	4.9	6.7	8.0	24.6
재정수지 (I=G-H)	-35.0	-13.4	-7.4	3.7	12.9	19.4	28.6
GDP 대비 비중	-0.2	-0.7	-0.4	0.2	0.6	0.9	–
순부채(GDP 대비)	–	18.6	18.4	17.3	16.1	14.7	–

주: 합계는 2018-19년부터 2021-22년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호주 재무부(2018), Budget Strategy and Outlook Budget Paper No.1 2018-19

호주 정부는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견고하게 할 전망이다. 호주는 2013-14년 재정수지(현금)가 GDP의 -3.0%에서 적자폭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고, 향후 10년 동안 계획상으로는 2019-20년 흑자로 전환하고, 2026-27년은 GDP의 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부채[3]는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19년 GDP의 18.4%(3,449억 달러)에서 2027-28년에는 GDP의 5.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순부채의 감소는 이자지출도 줄어들어(2018-19년 145억 달러 → 2021-22년 122억 달러) 재정여력을 다소나마 확보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이러한 재정건전화 목표는 전년도인 2017-18년 중기재정계획(MYEFO)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호주 정부 지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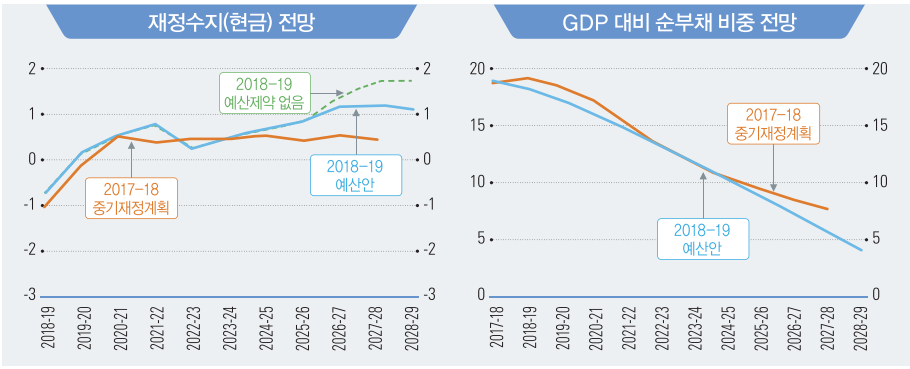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호주 재무부(2018), Budget 2018-19 Overview

재정수지(현금) 전망과 GDP 대비 순부채 비중 전망

(단위: %)



자료: 호주 재무부(2018), Budget 2018-19 Overview

2017-18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호주 정부는 2018-19년 예산안을 통해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수송 인프라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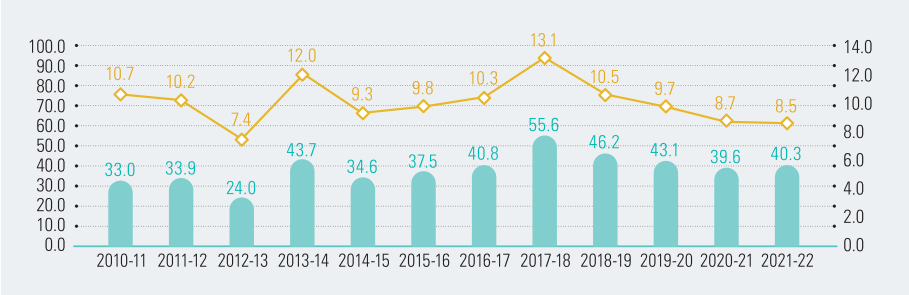
2 순운영수지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운영표에서의 순자산의 변화를 말한다. 또한, 순운영수지는 정부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활용하고 있다.

3 순부채는 총부채(total liability)에서 순 금융성자산을 제외한 지표이다.

부는 수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45억 달러를 지원하며, 향후 10년간(2027~28년) 750억 달러를 보조금과 융자, 지분투자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송 인프라 구축 주요 지역에 고용확대와 사회 접근성 제고를 위해 35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제공한다. 지역 기반시설 및 지역 사회 투자 지원을 위해 2백만 달러 규모의 기금(Building Better Regions Fund)과 지역의 장기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억 7,200만 달러 규모의 기금(Regional Growth Fund)을 추가한다. 호주 정부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자본지출로 2018-19년 462억 달러(GDP 대비 10.5%)를 투자하며, 투자 규모는 점차 줄어들어 2021-22년에는 403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주 정부 자본지출 추이

(단위: 십 억 달러, %)



자료: 호주 재무부(2018), Budget Strategy and Outlook Budget Paper No.1 2018-19. 저자 그림 작성

호주 정부는 국가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학과 의료 연구와 기술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산안에 13억 달러 규모의 국민 건강 및 의료 산업의 진흥 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의료 기술, 생명공학, 의학 분야의 이익창출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진흥 계획을 통해 10년 동안 미래 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유전자 연구, 임상시험 프로그램,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지원한다.

과학연구 인프라 투자도 지속한다. 호주 국립연구 시설에 향후 5년간 3억 9,33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연구를 통한 수요자에게 더 나은 성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 투자 분야는 자궁경부암 백신 개발, 양자 컴퓨팅 개발 및 발전 등 다양한 분야로 다양하다. 한편, 향후 4년간 450만 달러를 지원하여 과학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 더 많은 여성의 교육과 직업을 갖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신기술 산업개발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기술 로드맵, 표준화 개발 등 인공지능(AI) 및 기계학습 능력 개발을 위해 2,990만 달러를 투자하며, 공동연구센터와 대학 박사 과정 지원 등 지식과 개발기술 등에도 지원한다.

호주 정부는 호주의 혁신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한다. 핵심 내용은 연구개발투자자가 최대 투자수익을 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액 세액 공제를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16년까지 최초의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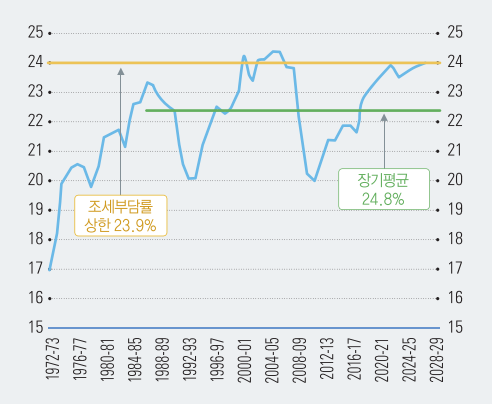
표 달성에 실패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년 7월부터 매출액 2천만 달러 이상의 대기업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R&D를 지원한다. 정부는 R&D 투자에 대해 최대 4백만 달러의 조세 감면으로 기업 투자와 R&D사업의 지속과 투명성으로 R&D 성공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세부담을 낮게 하고, 공평하게, 간소화하도록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호주 정부는 장기적으로 개인소득세 부담률을 GDP의 23.9%로 상한을 정하도록 개편을 추진한다. 첫 단계로는 2022년까지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에게 공제를 확대하여 개인소득세부담을 경감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세율 32.5%[4] 구간을 87,000달러에서 90,000달러로 상향한다. 이 조치로 약 20만 명의 임금근로자가 더 높은 과세구간(37.0%)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셋째는 2024년부터 과표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세율 32.5% 구간과 37% 구간을 통합하여 32.5%로 단일화하여 장기적으로 중산층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명목 소득이 증가되고, 자연스럽게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이 높아짐으로써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는 감춰진 증세(bracket creep)[5]에 있다.

호주 정부는 지하경제가 세금기반을 약화시키고, 성실 납세자와 기업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지하경제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고자 Task Force(이하 TF)를 설치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TF는 불법 담배를 판매하거나, 돈세탁 및 탈세 목적의 기업 행위 또는 기관을 탐지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제기한 문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은 지하경제 TF 보고서(Black Economy Taskforce final report)를 제출하였다.

호주 조세부담률

(단위: %)



자료: 호주 재무부(2018), Budget 2018-19 Overview

호주 분야별 재원배분

분야별 재원배분은 2017-18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과 중장기 계획에 따른 결과이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분야는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로 전체 지출의 36.0%(1,757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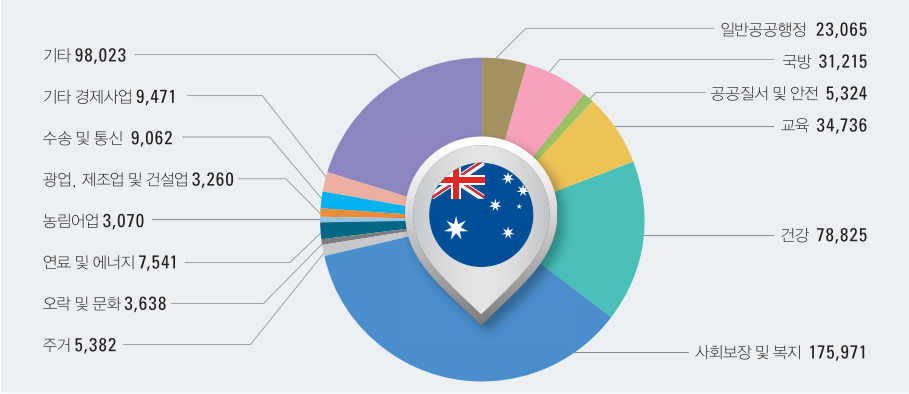
4 호주의 개인소득는 5단계 누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8,200 이하는 0%이며, $18,200~$37,000는 19%, $37,001~$90,000은 32.5%, $90,001~$180,000은 37.0%, $180,001 이상은 45.0%이다.

5 누진적 조세체계 하에서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를 차지한다.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고령자, 아동, 장애인, 재향군인, 간병인, 실업자 지원을 위한 사업이 중심이며, 2017년 고령인구 비율이 15.5%에 이르는 등 관련 지출 비중이 높은 특징이 반영되었다. 또한, 국가 책임 교육과정과 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교육 분야에 전체 재정지출의 7.1%(347억 달러)를 지출하며, 국방비로 7.1%(312억 달러)를 지출한다. 전년대비 분야별 증감을 보면,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이 9.4% 증가하였고, 사회복지지출이 8.2%, 기타 사업이 7.2%, 교육이 2.9% 증가한 반면, 일반공공행정이 -7.6% 줄었으며, 기타경제사업이 -7.3%, 오락 및 문화 -4.1%, 수송 및 통신 -2.1% 축소되었다.

호주 2018-19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백만 달러)



호주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17-18 예산		2018-19 예산안		2018-19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반공공행정	24,975	5.3	23,065	4.7	-7.6
국방	30,982	6.6	31,215	6.4	0.8
공공질서 및 안전	5,251	1.1	5,324	1.1	1.4
교육	33,746	7.2	34,736	7.1	2.9
건강	77,603	16.6	78,825	16.1	1.6
사회보장 및 복지	162,621	34.7	175,971	36.0	8.2
주거	5,435	1.2	5,382	1.1	-1.0
오락 및 문화	3,793	0.8	3,638	0.7	-4.1
연료 및 에너지	7,515	1.6	7,541	1.5	0.3
농림어업	3,019	0.6	3,070	0.6	1.7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	2,979	0.6	3,260	0.7	9.4
수송 및 통신	9,252	2.0	9,062	1.9	-2.1
기타 경제사업	10,212	2.2	9,471	1.9	-7.3
기타	91,407	19.5	98,023	20.1	7.2
총지출	468,788	100.0	488,584	100.0	4.2

자료 : 호주 재무부(2018), Budget Strategy and Outlook Budget Paper No.1 2018-19., 저자 편집

호주 포트폴리오 예산제도

호주 분야별 재원배분은 포트폴리오 예산제도 하에서 포트폴리오의 지출 프로그램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결정된다. 1980년대에 도입된 포트폴리오 예산방식은 예산을 다수의 기관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예산 편성, 집행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정정책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산에 대한 논의는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1개 포트폴리오에 정부부처 등 다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8-19년 포트폴리오는 1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트폴리오에서는 10월까지 포트폴리오별로 해당 기관의 사업제안서를 전략예산위원회에 제출한다. 전략예산위원회[6]에서 사업제안을 검토하고, 예산지출 한도가 주어지면, 포트폴리오 장관은 해당 기관들이 한도에 맞춰 예산 요구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예산안에는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Portfolio Budget Statements)가 별첨으로 제출되며, 기관별 사업의 예상 소요재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이다. 우리나라의 부처별 사업설명자료와 유사한 성격이다. 이 보고서에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재원, 전망 등이 수록되어 있다.

호주 예산수립 과정

7월	재무장관의 예산집행·예산작성규칙 등 발표
10월	사전 예산단계로서 포트폴리오 장관의 사업제안 제출
11~12월	전략예산위원회의 사업제안 검토
2월	포트폴리오 예산서 작성 및 제출
3~4월	지출심의위원회의 예산 심의
4월	예산내각에서의 예산 심사, 재무부의 예산서류 작성
5~6월	예산안 의회 제출, 예산토론 등 하원의 심의·의결 각 위원회의 예산안 청문회 등 상원의 심의·의결, 총리의 승인
7월	새 회계연도 개시

참고문헌

- 호주 재무부. (2018). Budget Strategy and Outlook Budget Paper No.1 2018-19.
- 호주 재무부. (2018). Budget 2018-19 Overview.
- 호주 재무부. (2018). Budget Measures Budget Paper No. 2 2018-19.
- 호주 재무부. (2018). Portfolio Budget Statements 2018-19.
- OECD Stat, 〈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 7. 30.)
-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 (검색일: 2018. 7. 30.)

6 전략예산위원회는 총리, 부총리, 재무부장관으로 구성하며, 사업제안들을 심사한 후 포트폴리오 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유구한 국가부채 해결책

근대 유럽의 화폐가치 하락과 채무불이행

김동욱
kimdw@hankyung.com

최근 이탈리아의 정치·경제 불안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유럽발(發) 재정위기 우려도 다시 불거졌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서양사회에서 국가부채의 채무불이행 문제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배 째라' 식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은 중세 및 근대 초기에 군주들이 채무상환 비용이 재정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자 흔히 쓰던 방법이었다.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는 1340년대 이런 방법으로 당시 이탈리아의 금융 '거인'인 바르디가와 페루치가를 쓰러뜨렸다. 15세기 프랑스 자본가로 왕실군대에 갑옷과 무기를 제공하고, 왕실창고와 가구창고 등 축재와 관련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손을 댔다는 자크 쾨르는 샤를 7세가 채무불이행을 단행하자 가장 큰 피해를 본 희생양이 됐다. 샤를 7세는 백년전쟁으로 피폐해진 프랑스를 재건하기 위해 자크 쾨르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크 쾨르를 투옥해 버렸다. 동시에 그는 제노바 자본가들도 위기에 몰아넣었다.

에스파냐 펠리페2세는 부도 선언을 통해 푸거 가문을 뿌리째 흔들었다. 푸거 가문의 대출금은 1510년 20만 플로린에서 16세기 중반 500만 플로린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에스파냐 합스부르크 왕조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순식간에 900만 플로린 이상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푸거가의 자본수익률도 1520년대에는 50%를 넘었지만 1550년대 5.5% 수준으로 떨어졌고, 1560년대에는 순손실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펠리페2세 시절 에스파냐 재정을 복기해 보면 국가예산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게 운영됐는지를 알 수 있다. 1562년 카스티야 후로스(장기국채) 이자지급으로 50만 두카트, 플랑드르 후로스 이자지급으로 30만 두카트가 지불됐다. 여기에 아라곤(5만 두카트), 시칠리아(15만 두카트), 밀라노(20만 두카트), 대서양 여러 섬들(3만 두카트) 후로스 이자지급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123만 두카트가 한해의 후로스 이자비용이었다.

1571~1573년 기간 에스파냐의 총 부채는 5,000만 두카트에 달했고, 1581년에 베네치아 주재 에스파냐 대사는 본국의 부채가 총 8,000만 두카트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보면 펠리페2세는 20년 동안 국가부채를 네 배나 늘려 놨다.

1582년과 1583년에 펠리페2세는 연거푸 그의 재무 관련 각료들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

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어도 2년 연속으로 제국의 자금흐름을 미리 파악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밀라노와 마드리드에 '전략적 비축금'으로 주화를 예비해 놓도록 했다. 하지만 잉글랜드와 관계가 악화되면서 기존의 계획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의 군사비가 지출됐다. 설상가상으로 펠리페2세의 재정 관련 이해도도 떨어졌다. 펠리페2세는 각종 기록들을 통해 자주 '재정 관련 보고서를 읽고 또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푸념을 남겼다.

1588년 무적함대의 잉글랜드 원정과 패배 등으로 재정상황이 급박해지자 펠리페2세는 매주 토요일마다 재무 관료들에게 현재 수중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토록 했다. 때론 왕실 금고에 남은 자금 총액이 무적함대 하루 운영비용인 3만 두카트도 되지 않는 날도 허다했다.

1400년대 이전 유럽이 분권화 됐을 때는 국가재정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주나 국왕이 알아서 자기영지에서 공물, 지대, 부과금, 이용료 등을 거뒀다. 국왕들도 개인 명의로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16세기 이후로는 전쟁이 대규모화되고 국가 재정지출이 급속히 늘면서 국가가 예산과 세금, 재정을 제도화했다. 프랑스 대혁명 직전 재무총감 네케르에 따르면 프랑스 국가지출 중 3분의 2는 군대에 할당됐다. 1529년 이전 이탈리아에서 동원된 합스부르크 에스파냐의 군대는 3만 명을 넘지 않았지만 1536~1537년에는 6만 명이 프랑스와 전쟁을 위해 동원됐고, 1552년에는 15만 명이 칼5세 휘하에 있게 됐다. 17세기에 들어서면 합스부르크제국은 플랑드르 지역에서 네덜란드와 80년 가까이 대립하면서 연평균 6만 5,000명의 군대를 해외에 배치했다. 인구의 7%에 해당하는 1만 2,000명을 효율적인 용병으로 양성해 짭짤한 수익을 거뒀던 18세기 헤센-카셀 같은 조그만 영방국을 제외하면 막대한 전비가 드는 대규모 전쟁은 대

Europe

서양사회의 오랜 역사
국가부채의 채무불이행

부분의 국가에게 큰 부담이었다.

실제 1600년 프랑스 일반 노동자의 세금 부담은 연간 50시간 노동시간분에 해당했다면 1963년에는 세 부담이 700시간분 노동에 해당할 정도로 근대국가 발전과 함께 재정의 발달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역사의 일반적인 추세였다.

여기에 이베리아 반도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지역까지 상업 도시국가들이 사라지거나 미약해지면서 중앙집권화 된 유럽 주요국은 장기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재정이 정교해졌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나 '파산'이라는 위험한 지뢰밭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근대에 접어들면서 채무불이행이 너무 자주 일어나 사실상 '제도화 됐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국가가 파산했다는 표현보다 모라토리엄이나 채무재조정(rescheduling), 강제전환(forced conversion) 등의 용어로 이 같은 채무불이행 사태가 순치 되고, 세분화 되고, 덜 무섭게 포장됐을 뿐이다.

에스파냐는 1556~1696년 사이에 14차례에 걸쳐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557년 칼5세는 바야돌리드 칙령을 통해서 장기국채인 후로스의 금리를 5%로 동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62년 에스파냐 왕실은 1년 예산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43만 두카트를 국가부채의 이자를 갚는데 써야만 했다. 에스파냐 정부는 오늘날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전략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미국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대신 단기국채를 내다 팔아 장기 금리를 낮추는 정책)' 정책을 쓴 것처럼 단기융자 채무인 아시엔토스를 장기국채인 후로스로 전환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1625년 최고조(1240만 두카트)에 달했던 아시엔토스(단기융자 채무) 규모가 1654년에는 100만 두카트로 줄어들면서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단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결국 국채 만기연장이나 반 강압적인 국채금리 인하, 금 가격 인상 등으로 대응해도 한계에 다다르면 부도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에스파냐 정부가 완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것만 따져 봐도 1575년, 1576년, 1607년, 1627년, 1647년에 이른다.

근대 초기 프랑스도 정기적인 채무불이행 국가 중 하나였다. 앙리4세는 '대금업자들을 스펀지처럼 쥐어짰다'는 평을 들었지만 빌린 돈을 갚는 데는 모범적이지 않았다. 앙리4세 이후 프랑스 국왕들도 줄줄이 금융업자들에겐 '큰 구멍'이었다. 프랑스 왕정은 1559년, 1598년, 1634년, 1648년, 1661년, 1714년, 1721년, 1759년, 1770년, 1788년에 빚을 갚지 않고 '펑크'를 냈다.

에스파냐와 프랑스 등에선 채무불이행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행보였다. 전쟁을 위해 돈을 빌리고,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올리려 하지만 시끄러운 소요만 일으킬 뿐 실패했다. 또다시 채무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리고 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전체 혹은 일부 빚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형태가 반복된 것이다. 삼부회 소집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을 당길 때도 루이16세가 제기한 주요 안건은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것이었다.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은 세금을 쥐어짜 부도를 피해보려 했지만 시민들의 엑소더스만 발생할 뿐 파국은 피하지 못했다. 1582년 합스부르크 제국의 행정 모범지대로 평가받던 피렌체

에서 세금부담이 늘자 주민 대량 탈주 사태가 발생했다.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던 포르투갈에선 모든 물품에 20%의 판매세가 부과됐다. 수산물에 대해선 무려 판매액의 50%가 세금이었다. 1587년 프랑스 부르봉 왕가는 흉작으로 지역 경제 기반이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에서의 조세수입을 두 배로 증액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했다던 영국도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1672년 찰스2세는 부분적인 지급불이행을 선언했다. 1685년에는 국채이자 지급이 중단돼서 1705년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잉글랜드에선 또 1707~1708년, 1716~1717년, 1727년, 1749~1750년, 1756년, 1822년, 1824년, 1830년, 1844년에도 소지하고 있던 국채를 액면이자가 낮은 증권으로 교환하는 강제 전환(forced conversion)이 시행됐다.

이 같은 국가부도는 전 유럽적 현상이 됐다. 독일 유력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분석에 따르면 1800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스는 무려 5번의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하며 100년 넘게(전체 기간의 51%) 파산 상태에서 국가가 운영됐다. 러시아도 39%(5번)의 기간을 국가부도 상황에서 보냈다. 헝가리(37%·7번)와 폴란드(33%·3번) 등도 3분의 1 이상의 세월을 부도 하에 흘려보냈다. 오늘날 재정이 튼실하기로 유명한 독일도 7번의 파산과 13% 기간에 달하는 국가부도를 경험했다.

이처럼 근대 초 이래 유럽 국가에선 채무불이행이 반복되면서 국채는 더 높은 금리로 발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갚아야 할 빚이 더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오늘날 잊을 만하면 다시 불거지는 유로존 위기처럼 당시 유럽 주요국들도 빚으로 빚을 갚다 결국 배를 째는 악순환의 고리는 쉽게 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역사는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반복된다.

참고 문헌

- 니알 퍼거슨. 류후규 옮김. (2002). 「현금의 지배-세계를 움직여 온 권력과 돈의 역사」. 김영사.
- 페리 엔더슨. 김현일 外 옮김. (1993). 「절대주의 국가의 역사」. 소나무.
- '국가부도? 유럽선 흔한 일'. 한국경제신문 2010년 3월 15일자.
- Fernand Braudel. (1995). 「The Mediterranean and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Age of PhilipII Vol.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eoffrey Parker. (2000). 「The Grand Strategy of Philip II」. Yale University Press.
- Roger Lockyer. (1993). 「Habsburg and bourbon Europe 1470~1720」. Longman.
- Douglass C. North and Robert Paul Thomas. (1995).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rles Tilly. (1992).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Blackwell.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PFIS NEWS

제3차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협의회 개최

e나라도움운영단은 지난 7월 25일(수) e나라도움의 주요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제3차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 11인과 교수 등 전문가 6인 및 공공기관 4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①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 ② 국고보조금 공시제도 운영현황, ③ e나라도움 사용자 편의 기능개선 추진현황, ④ 2017년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결과 등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금번 협의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은 향후 e나라도움 시스템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dBrain 교육

한국재정정보원은 2018년 7월 19일(목)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 및 대외협력 담당자로 구성된 연수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정개혁 및 재정정보시스템(dBrain)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보원 설립 배경, 주요 기능과 국제협력 전략을 소개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재정개혁 로드맵 및 재정정보시스템(SPAN)과 한국의 주요 재정개혁 내용 및 dBrain 구축 경험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의미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취임

김재훈 주 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8월 16일(목) 한국재정정보원 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기획재정부는 "김 신임 원장은 기획예산처 사회재정1과장과 노동여성재정과장,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 고용부 정책기획관, 국회 예산결산특위 파견관을 역임하는 등 재정업무 전반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또 "김 신임 원장이 재정과 예산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재정혁신과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 신임 원장은 이날 오후 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정정보원이 디브레인과 e나라도움 등 재정정보화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안정성, 보안성, 전문성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정보원이 나아갈 방향과 해야할 일을 정립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e나라도움 시스템의 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물론, 연구 분야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진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격언을 소개하며, "배려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월간

나라재정

AUGUST
2018 Vol. 20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한국재정정보원장)
편집위원장 박용주(재정정보연구본부장)
편집위원 장정진(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
최성진(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사무관)
연훈수(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
심혜인(재정정보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오병욱(경영지원본부 차장)
이현석(dBrain운영본부 차장)
박종필(사이버안전센터 차장)
김칠수(e나라도움운영단 차장)
편집간사 김도일(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원)
디자인 · 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02-549-5298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AUGUST
2018 Vol. 20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ISSN 2508-8971